

| **오름의 학술신서** |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박재창 외, 484
- 거버넌스 안네 메테 키에르 지음 · 이유진 옮김, 296
- 전자민주주의 김용철 · 윤성이, 336
- 일본의 미들 파워 외교 소에야 요시히데 지음 · 박철휘 외 옮김, 176
-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박찬욱 · 이현우 외, 416
- 독일연방공화국 60년—1949-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심익섭, M. 치맥 공편, 544
- 인도정치학—현대의 이슈와 관심사  
마헨드라 프라사드 싱 · 레카 삭세나 지음, 신소진 옮김, 448
- 버마 그리고 미얀마—네윈과 아웅산수지 양길현 지음, 368
- 현대 중국의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이해, 전망, 그리고 과제  
김진영 · 차창훈 공편, 216
- 중국 · 북한 동맹관계—불편한 동거의 역사 최명해 지음, 456
- 중국의 부상—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전성홍 · 이종화 편, 352
- 중국 현대국제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440
- 글로벌 한국의 신외교전략—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최영중 지음, 304
- 중국지역연구와 현대중국의 이해 공봉진 지음, 436
- 전환기의 중국사회 I, II 전성홍 편, 308/356
- 매니페스토와 지방정치 개혁—일본 가나가와현의 실천 사례  
마쓰자와 시게후미 지음, 하동현 옮김, 312
-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김희민 · 리처드 포딩 지음, 조진만 · 김홍철 옮김, 232
- 동아시아 환경안보 현인택 외, 384
-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정치지형과 전략 서진영 · 이신화 · 김장수 편, 328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정치제도의 대응 남궁영 외 지음, 208
- 국제정치—역사와 관점을 넘어 쟁점까지 김준형 저, 362
- 인권과 국제정치 책 도널리 저 · 박정원 역, 341
- 현대 국제정치 핵심논쟁 12제 김석우 외 편역, 500
-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 홍익표 · 진시원 공저, 496
- 세계평화지수 연구 이성우 외, 328
- 세계화시대 국제관계 김용호 지음, 248
- 핵비확산체제의 위기와 한국 백진현 편, 416
- 환경과 사회-인간, 생명, 그리고 생태 김영래 외, 368
- 항공우주시대 항공력 운용—이론과 실제  
이명환 · 이성만 · 장은석 · 강창부 공저, 이종학 감수, 416
- 한국 국회의 현실과 이상 이갑윤 · 이현우 편저, 376
- 민주시민교육 핸드북 II—방법론 신두철 · 허영식 공편, 432
- 한국의 선거V 어수영 편저, 520
-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박찬표 저, 360
-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의회정치연구회, 496
- 분단 한반도의 정치경제—남한 · 북한 · 미국의 삼각퍼즐 남궁 영 지음, 318
-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송중환 저, 512
- 평화교육 이언 M. 해리스 · 메리 L. 모리슨 지음, 박정원 옮김, 384
- 동아시아 출판문화사 연구 I—17세기 한 · 중 · 일 출판문화 비교  
부길만 · 황지영 지음, 224
- 정치사상의 이해 I, II 폴 슈마커 외 지음 · 양길현 옮김, 472/432

값 15,000 원



제주평화  
연구원  
연구총서 18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이성우 지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8

# 2010 한국인의 평화관

## 외교정책과 여론

이성우 지음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연계되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대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안보정책, 동맹정책, 국제교류정책, 대외원조정책,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분석을 제시하였다.

\_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의 본 연구는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연구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라는 제목으로 추진하였다. 평화관이라는 단어는 국제관계연구에서 생소한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외정책 일반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

대외정책은 양자관계에서 또는 다자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평화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평화를 증진하는 특성이 있다.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성향은 정책의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_ 서장 중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자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평화운동의 요람이 되고자 설립되었다. 연구원은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제학술협력, 평화확산 운동, 국내외 대표적 연구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관련정보 자원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 및 번영,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제주프로세스의 제도화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www.jpi.or.kr)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0

##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인 쇄 | 2011년 3월 10일

발 행 | 2011년 3월 15일

지 은 이 | 이성우

발 행 인 | 부성옥

발 행 처 | 도서출판 오름

등록번호 | 제2-1548(1993. 5. 11)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0-6

전 화 | (02)585-9122, 9123 팩스 | (02)584-7952

E-mail | oruem@oruem.co.kr

URL | <http://www.oruem.co.kr>

ISBN 978-89-7778-352-2 93340      정가 15,000원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16

#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이성우 지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아시아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은 평화와 다자협력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논의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은 해마다 그해의 연구결과물을 정리하여 단행본 형태의 연구총서를 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인의 평화관”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외교정책에 대하여 가지는 다양한 가치관을 여론조사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외정책의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는 주변국과의 협력, 안보문제, 경제

문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인권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특징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과 함께, 이를 출발점으로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확대하여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평화관 연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의 발전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발전은 동아시아 국가의 상호협력과 다자협력체 논의의 확산과 이해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다자협력 그리고 세계의 평화라는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제주평화연구원이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 한국인의 평화관』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지면을 빌어 매년 저희 연구원의 결과물의 출판에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서출판 오름의 편집진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월

제주평화연구원장 한태규

민주주의 시대이다. 정책결정과정과 관련해서 민주주의는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는 상황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당성의 측면에서 단순하게 보이는 여론의 반영이 현실정치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 것이 현대 정치의 현실이다.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독선적인 정책결정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면 인기영합적인(populist) 정책결정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과 정책의 상호관계는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선 이루어진 연구를 지켜보면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논의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여론의 특성과 여론과 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정치문제를 논의할 때 공

유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째, 어떤 정치 문제이든지 그 논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모두 정치 전문가이다. 모든 논객이 전문가라는 논의가 사뭇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정책을 두고 논의하는 내용은 맞고 틀리고(正誤)의 문제라기보다는 좋고 싫고(好惡)의 문제로 수렴될 수 있겠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반대, 특정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개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 문제에서 논의되는 주장은 항상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개인적 차원으로 문제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한편의 주장을 개인적인 문제로 논의하는 경우 그것은 논의가 아니라 언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혼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 과정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이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과 같이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과학에서 분석을 통해서 일반화된 이론의 개인적 적용

도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이다. 과학은 일반화할 수 있는 객관적 명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자연과학의 경우라면 일반화된 명제를 개별 연구단위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사회과학에서는 일반화된 명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개별 연구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화된 명제가 학계에서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력이 낮은 개인에게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을 빙자한 인신공격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과 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가지는 중요성과 더불어 여론 분석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도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시대와 멀티미디어 시대의 결합으로 여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여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여론과 대외정책의 선호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이 연계되는 현대 국제관계에서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안보정책, 동맹정책, 국제교류정책, 대의원조정책,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의 위상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정책결정자, 학자, 그리고 일반대중 등 여러분께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지침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또한 부족하지만 2010년에 추진한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의 연구에서는 보다 역동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1년 1월  
세계 평화의 섬에서

이성우



## 차례

▣ 발간사 \_ 5

▣ 머리말 \_ 7

서 장 | 들어가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 13

제1장 | 기존 연구와 이론의 고찰 21

I. 국내학계의 기존연구 25

II. 미국학계의 기존연구 31

III. 여론과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방향 38

제2장 |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호관계 43

I. 여론에 대하여 45

II. 여론조사에 대하여 52

**제3장 |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서술적 분석** 69

- I. 정책의 관심 72
- II. 안보정책과 여론의 관심 75
- III. 국제경제와 여론의 관심 77
- IV. 보편주의적 가치와 여론의 관심 80
- V. 주변국에 대한 여론의 인식 82

**제4장 |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상관관계분석** 91

- I. 방법론 논의 96
- II. 이념적 성향과 평화관의 상관관계 98
- III. 인구통계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119

**제5장 | 맺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의 정책적 함의** 159

- I. 연구의 평가: 장점과 단점 161
- II. 결론에 가늠하여: 한국사회에서 여론의 힘 163

◆ 참고문헌 \_ 167

◆ 색인 \_ 175

◆ 지은이 소개 \_ 179



|서장|

들어가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



## 서장

### 들어가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는 여론조사의 시대이다. 특정 사안에 관한 여론의 동향에 대한 보고가 과학적 여론조사 기법에 근거한 분석 인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현안으로 의미가 있는 정책 사안에 여론이라는 불특정 다수의 반응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흥미로운 연구주제이다. 현안으로 의미가 있는 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발표한 주체가 제기하는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론과 정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연구주제이다.

인터넷 신문을 보면 주요사건과 기사에 연결하여 다양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한다. 나름대로 동일한 사람이 중복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론조사의 표본이 자기선발(self selection)이라는 본

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시행한 주최자들은 여론조사자료가 시사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실시하는 뉴스와 관련한 여론조사 “라이브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29일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3,654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887명(24%)이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2,767명(76%)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전달한 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설문도 있었다. 이처럼 언론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외교정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뿐만 아니라, 이진희 삼성회장에 대한 사면에의 찬반여론과 같은 국내정치문제는 물론 스마트폰 기종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마케팅 관련 여론조사까지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대상 문항들은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충분한 현안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여론조사가 원칙적으로 대중 의견의 동향에 대한 탐지를 위한 시도이지만, 과학적 접근법이 결여되어 있는 여론조사는 언론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언론사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의 관심과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동원의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선거기간에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여론 조작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특정기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정책결정과 여론의 상관관계는 정치학의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였고, 국제관계와 외교정책의 연구에 있어서도 여론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국제관계연구에서 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도 미국의 학계에서 주도되었는데,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는 다분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정치철학적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학계에서는 국가의 이익을 대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외교정책 결정에 여론반영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로서, 여론의 본질에 대한 회의론에서 시작되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인의견의 종합을 의미하는 여론(Key 1961)의 주체인 대중은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불완전하고, 이 때문에 여론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정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2차 세계대전까지 우세하였다(Almond 1956; Lipmann 1949). 여론의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의견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미국학계에서 학문적 주장을 전개하였다(Rosenau 1967, 2). 국가가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자각은 반전시위와 징집영장의 소각과 같은 형태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정부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는 대중과 대중의 의견인 여론의 불완전성과 자기이익의 대변이라는 문제가 있다.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은 물론 지역개발정책 또는 환경정책 그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정책도 일단 결정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책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책임을 부담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2004년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를 수출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으로, 농축산업 분야는 칠레의 농산물이 수입되면 생산기반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것으로 예상하

고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칠레 간 무역은 2004년 15억 6,400만 달러에서 2010년 70억 4,9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5억 4,080만 달러에서 31억 1,450만 달러로 약 5배 증가였으며, 칠레의 대 한국 수출은 10억 2,300만 달러에서 38억 8,600만 달러로 약 3배가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농축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무역협정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판단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결과가 초래한 객관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이해득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의 문제와 이에 따른 개별 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접근이 중요한 학문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 책의 본 연구는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방향을 연구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라는 제목으로 추진하였다. 평화관이라는 단어는 국제관계연구에서 생소한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외정책 일반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본질적으로 평화(peace)의 반대는 분쟁(conflict)이고, 협력(cooperation)의 반대는 배신(defection)이라고 정의한다(Yi 2008, 90). 외교정책의 분석에 따르면 협력이 갈등과 수반되기도 하고, 갈등이 협력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인식론적인 근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신은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지고, 협력을 통해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관 연구는 외교정책의 평화와 분쟁 그리고 협력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대외정책에 대한 가치관은 궁극적으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외정책에 대한 가치관을 평화관이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대외정책은 성격에 따라 크게 군사적인 부분과 경제적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이 두 영역에서 국제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와 고립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4가지의 유형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외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협력을 동반할 수도 있고 갈등을 동반할 수도 있다(Holsti 1996, 122-127). 다시 말해서 대외정책은 양자관계에서 또는 다자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게 되면 평화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갈등을 해결하게 되면 평화를 증진하는 특성이 있다.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성향은 정책의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제 1 장|

기존 연구와  
이론의 고찰



## 제1장

### 기존 연구와 이론의 고찰

여론(public opinion)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이론적 과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 속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의 합(Key 1961)”이라고 정의한다. 전통적으로 여론은 엘리트 또는 정보를 보유한 사람들의 영향력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민주주의 진전과 더불어 여론의 주체인 대중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여론은 대중과 정치지도자 사이를 연계하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별히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정치 지도자와 엘리트에게 권한이 유보되어 있는 정책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 국제 정치의 특성상 국가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대외정책 결정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정

책 분야에도 여론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이 여론의 역할 증대를 가져왔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동어반복에 의한 항진명제(tautology), 즉 항상 참인 명제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면, 여론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동일한 의미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제관계연구의 학문적 중심으로 자리 잡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여론은 일반적 민주주의이론과 다른 특별한 상관관계를 의미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역할에 대한 대립된 시각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로 대별된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을 신뢰하지 않고 정책전문가들에 의존하는 엘리트 민주주의이다. 일반 대중은 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근시안적이고, 감정적이며, 이중성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대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대중의 불완전성 때문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을 대표로 선출하여 이들에게 정책결정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일관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데 바람직한 제도라는 이해가 확대되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정치 엘리트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대중의 포괄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보다는 엘리트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의 특성상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자국의 국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속성에서 대중의 선호를 받아들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중추수주의(populism)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서 일관되게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에서 여론의 역할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의

결정에 여론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 평화이론(democratic peace theory),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 그리고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과 같은 기존 국제관계연구의 성과와 서로 관련성이 높다.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정치와 국제관계의 연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핵심적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미국의 국제관계연구에서 전통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우리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였다.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남궁곤 1999, 33), 한국의 여론과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학계와 미국학계의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 국내학계의 기존연구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제관계연구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국내학계에서는 외교정책과 국내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외교정책론 분야의 체계화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외교정책과 여론에 대한 연구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남궁곤 1999). 외교정책의 새로운 분석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연계이론(Rosenau

1967)을 언급하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외적 요인을 의미하는 ‘밖’보다 사회의 조직과 기능, 국민의 성격과 행위, 그리고 물리적 생활여건을 포괄하는 ‘안’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하영선 1989). 외교정책과 여론의 연구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여론의 역할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하영선 1989; 김기정·이행 1992; 김성주 2008).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국제정치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알몬드와 리프만의 여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론은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며, 개인이 가지는 태도는 인식론적으로 불확실한 구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이런 이유로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은 극히 제한적인 영향력만 행사한다는 주장이다(Holsti 1996, 23-80; 남궁곤 1999).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을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서술적 분석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이정희 2004). 미국 정치에서 일반적인 사회집단 또는 이익단체는 전통적으로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에만 관심을 표명하며 외교정책은 부차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부시 행정부 기간 대두하였던 신보주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적 분위기를 친유대와 친이스라엘, 반공, 국제간섭주의, 안보우선, 전통적 가치의 선호와 같은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하였다(이정희 2004, 222). 미국의 대외정책에 나타난 보수성향을 미국 내 사회집단과 연계되어있다고 전제하고 미국내 사회단체를 이데올로기 집단, 두뇌집단(think tank), 기업집단, 군산복합체, 인종단체, 노동자집단 등으로 나누어 개별 단체의 외교정책에 대한 성향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설명하였다(이정희 2004, 208-221).

세계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국제정치  
주요행위자 논의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국가행위자보  
다는 초국가적 행위자와 더불어 국가 내의 행위자의 역할이 증대되  
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론적 주장이 있다(김성주 2001, 273-274). 20세  
기 후반을 지나 21세기까지 세계는 국내정치적으로 민주화의 물결  
(Huntington 1991)과 더불어 국제정치적으로는 다극화를 경험하였다.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학계에서는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을 분  
석하는 이론 틀의 정비를 고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여론의 중요성  
을 언급하였다.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성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여론과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책  
에 대한 이미지를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논문이 있다(박선원  
2002; 이정희 2002;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분석하면서 여론조사를 주도한 기관에 따  
른 결과의 차별성과 여론조사 표본 사이에 나타나는 차별성을 분석하  
였다(박선원 2002).

여론조사가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 문제 중의 하나는 조사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통일부와 국정홍보처가 조  
사한 자료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지지의 유도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65.6%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1998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햇볕정책과 관련하여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를 수집하여 정부, 보수  
주의 언론, 자유주의 언론의 3개 종류로 대별하여 비교분석하고 일반  
국정운영 지지도와 햇볕정책 지지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권은 일반국정운영 지지도가 40%대에 있을 때도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조사기관과 상관없이 항상 높게 나타났고 많게는 30%의 차이를 보일 때도 있었다. 또한 자유주의 언론의 조사결과가 보수주의 언론의 조사결과보다 5% 정도 높게 나타났다(박선원 2007, 127-129). 햇볕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성향의 결정요인으로 이념적 성향 외에도 지역주의, 연령, 교육수준을 들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햇볕정책에 반대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 햇볕정책을 지지하며, 지역적 특성도 영향을 미쳐 영남은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성향이 호남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가 뚜렷해지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원 2002, 133-142).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남한 내 사회단체 사이의 갈등에 중점을 두고 이념적 차별성을 통일관련 43개 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25개의 설문문항을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하였다(이정희 2002). 설문문에 포함된 질문들은 남북교류와 상호주의, 정상회담의 성과 및 영향, 북한의 변화 가능성과 변동 전망, 국가보안법 개폐, 미국 변수, 통일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대북정책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표본의 선정에 있어서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7개 단체, 민족회의 10개 단체, 통일연대 12개 단체, 그리고 자통협(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10개 단체로 총 59개의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이 중에 일부는 중복된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3개 단체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25개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 내에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단체 사이에 이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일반여론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지도층의 여론을 분석한 시도로써 이론적 의의가 크며 사회단체의 표방된 이념적 성향과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정상회담의 기대와 같은 부분은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이념적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단체에 해당하는 자통협, 통일연대, 그리고 민족회의의 경우는 대북강경 입장을 그리고 진보단체에 해당하는 민화협은 대북 유화적 입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희 2002, 124-146).

대북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여론의 분석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하여 통일의 대상인 형제이자 대치하는 적이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각각 민족주의적 성향과 현실주의적 성향으로 나눈 뒤 이 두 가지 성향의 강약의 조합에 따라 (1) 동포의 이미지는 약하고, 적의 이미지가 강한 경우 현실주의자(21.3%), (2) 적의 이미지는 약하고, 동포의 이미지가 강한 경우는 민족주의자(22.5%), (3) 동포의 이미지와 적의 이미지 둘 다 강한 사람은 보통사람(52.4%), 그리고 (4) 둘 다 약한 사람은 냉소주의자(3.8%)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여론의 성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인구학적 요소로 연령과 학력이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변수였고 소득, 성별 그리고 이념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김태현·남공곤·양유석 2003).

외교정책의 선호도와 일반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일반정세에 대한 여론은 개혁주의, 애국심, 평화주의, 그리고 외교적 자긍심으로 분류하였다.

개혁주의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애국주의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평화주의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끝으로 외교 자긍심은 “우리나라 외교는 너무 저자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혁주의, 평화주의, 외교적 자긍심 분야에서는 북한과 관련 반응에 대한 네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애국심을 측정한 분야에서는 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163-166).

북한에 대한 세부정책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별 네 집단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산분석도 실시하였다. 월드컵 분산개최, 경의선 복원, 장기수 송환, 식량·전력지원, 탈북자 정착지원, 국방비 삭감, 북미수교, 주한미군 감축 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세부정책에 대한 선호와 네 집단의 성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 사이의 갈등은 대체로 보통사람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민족주의자와 현실주의자에 의해 표출된다고 전제하고 이들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의선 복원, 식량과 전력지원 그리고 이념적으로 민감한 국방비 증감과 주한미군 문제에서는 현실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입장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월드컵 분산개최나 탈북자 지원 그리고 북미수교와 같은 긴장완화와 체제안전, 인도적 문제의 접근에 대해서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찾아냈다(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 167-169).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박선원 2002; 이정희 2002; 김태현·남궁곤·양유석 2003)는 국제정치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분석의 대상이 된 대외정책이 대북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범위를 외교정책 일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여론이 대북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설은 적절한 추론이지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 안보, 문화, 기여외교, 기후변화, 인권외교, 핵개발 등 외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대외정책 일반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론조사가 일반여론과 시민단체 대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만 일반여론과 시민단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은 연구가 상당정도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학계의 경우 여론지도층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여 일반 대중의 선호와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Wittkopf 1990; Hinckley 1992; Chittick, Billingsley and Travis 1995; Holsti 1996). 셋째,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념성향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와의 상관성에 집중되어 있고 여론조사 항목 상호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없는 한계가 있다.

## II. 미국학계의 기존연구

미국학계에서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중심에는 홀스티(Holsti 1996)가 있다. 그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규

범적 주장으로 여론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국제정치 연구에서 이론적 관점에 따라 현실주의자들은 여론은 감정적이며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자유주의자들은 여론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이며 민주주의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외교정책 수행의 비밀주의를 제거한 공헌이 있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적 주장에 동조하는 연구에서는 알몬드-리프만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1943년 이후 조사한 여론 자료를 통해서 대중은 이념적 기초는 없지만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화와 영속성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첫째, 대중들의 국내정치적 성향과 외교정책에서 성향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국내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은 대외정책에서 협력적 국제주의와 관련이 있고, 현실주의자들은 군사적 국제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홀스티(Holsti 1996)에 따르면 대중은 외교정책에 대한 복잡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도미노이론, 1972년 뮌헨 사건의 교훈, 월남전의 교훈, 냉전적 사고와 같은 단순한 인식론적 지표에 의존하여 핵 정책, 테러정책, 공산주의 등에 대해 이해한다고 보았다.

여론의 미약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중의 정서와 정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일치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여론의 미약한 영향력의 원인으로 엘리트의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론 지도층의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몇 가지 주요한 외교정책 의제에 대하여 대중과 여론 지도층을 비교한 결과, 여론 지도층은 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여론 지도층이 여론을 선도하거나 조작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국내 경제 및

사회 정책과 외교정책 성향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다수가 외교정책에서 타협적 자세를 보여주었고, 국내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국제정치적으로 강경론자이거나 국제주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중과 여론 지도층의 외교정책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정당, 이념, 세대, 성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일반 대중에 있어서 보다 여론 지도층이 외교정책 선호도에 있어서 보다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정당에 대한 선호는 월남전 이전에는 외교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다가 월남전 이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군사적 문제에서 보다 선명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념적 선호도는 외교정책의 선호에 일관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다는 대중은 협력적 국제주의를 선호하고 군사적 국제주의에 반대하였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 저자는 외교정책 성향을 결정하는데 정당에 대한 선호도 보다 이념적 선호도가 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셋째, 세대별 차이는 외교정책 선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뮌헨세대나 베트남세대는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외교정책 선호에서 가시적인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중과 여론 지도층 두 집단 모두에서 가시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도 외교정책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외교정책에 더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고 생각되고 여성이 보다 평화주의적이고 남성이 보다 호전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성별에 따른 외교정책 선호의 차별은 거의 없었다.

이 밖에도 교육, 지역, 인종과 같은 인구통계변수가 고려되었는데 교육은 특별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적 차별성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중서부 주민들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남부 주민들은 국제주의적 성향과 군사적 성향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동부와 서부의 주민들은 협력적 국제주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종의 차이는 전쟁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홀스티의 연구는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논의를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의 다른 분석들은 알몬드-리프만이 논의했던,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론의 특성이 변덕이 심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서이론(mood theory)에 따르면 여론은 일관된 체계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도전으로 대중에 공유된 기본적인 사고가 정책의 방향과 이슈의 선호를 제한하는가의 문제를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정하였다(Hurwitz and Peffley 1987). 인자분석은 여론의 구조 속에 위계적 질서(hierarchical structure)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LISREL이라는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모델에 따르면 정보는 핵심가치, 일반적 성향, 특정 이슈의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핵심가치는 특정한 행위에 연결되는 기본적인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전행위의 도덕성이나 인종중심주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 성향은 정부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주의, 반공사상, 그리고 고립주의를 의미한다. 끝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특정 이슈는 국방비 지출, 핵군비통제, 군사적 개입, 대소련 정책, 국제무역과 같은 특정 정책 선호를 의미한

다. LISREL을 이용한 통계분석의 결과는 잠재적 요인 사이에 높은 수준의 상호관련이 있고 이들 사이의 특정한 성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고립주의는 군사 개입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교전 행위에서 도덕주의는 고립주의에 부정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저자들은 다른 수준의 정책 가치들 사이에 위계적 질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는 대중의 여론은 외교정책의 구조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 신념체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서이론은 여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LISREL의 인자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도 원천적인 제한이 있다(Hurwitz and Peffley, 1987). 인자분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은 이론적 추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Nincic(1997)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여론의 일관성에 대한 정서이론의 주장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반박했다. 외교정책과 여론에 관하여 고립주의의 두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탄력성 이론에 따르면 국제적 활동에 대해서 대중적인 저항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저항은 외부의 적에 의한 위협에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 국내비용이론에 따르면 국제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대외적 개입에 대한 국내정치적 기회비용에 달려있다고 한다. 탄력성 이론은 여론의 비밀관성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해 국내비용이론은 대외정책에 대한 여론의 일관된 반응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제주의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국내적 조건과 외교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강조에 달려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국내정치적 비용은 물가상승과 실업률과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제지표는 국제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중은 제한된 자원으로 국내문제에 사용되어야 할 에너지가 국제문제에 소비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문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강조는 대통령이 의제선정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역할 하기 때문에 대중의 국제주의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통계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설이 말한 것처럼 경제지표는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Nincic(1997)은 교육과 국제주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단순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제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물가상승과 실업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에 따라서 국제주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교육은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보다는 물가상승에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물가상승보다 실업에 더 신속하게 반응했다.

인구통계와 외교정책 선호도 사이에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켰는데 이는 의미 있는 논의로 평가된다(Nincic 1997). 국제정치적 개입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외교정책의 국내정치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는 국제적 개입에 따른 국내정치적 기회비용의 함수라고 결론내렸다.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유형을 군사와 경제 두 분야로 나누고 국제적 성향과 고립적 성향의 두 가지 대립적 성향과 결합하여 국제주의(internationalist), 고립주의(isolationist), 수용주의(accommodationist), 강경주의(hard-liner)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다(Wittkopf 1994). 국제주의자는 경제분야와 군사분야 모두에서 국제적인 성향을 지지하는 한편 고립주의자는 경제와 군사 모두에서 대외적 개입에 반대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수용주의자는 경제적으로 국제적 개입을 지지하는 반면 군사적 개입에는 반대하는 경우, 강경주의자는 군사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반면 경제적 개입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유형화하였다. *Chicago Council*이 수행한 *CCFR Survey*에 나타난 미국인들의 외교정책에 대한 신념체계를 분석하였는데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그리고 걸프전과 같은 국제관계의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외교정책 선호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정치엘리트의 다수(35%)는 수용주의적 경향을 보였고 대중의 다수(30%)는 강경노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의 대중은 협력적 국제주의를 선호하고 군사적 국제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월남전 이후 세대와 탈남전세대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세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두 시기에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경제와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미국인들의 다수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적 가치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과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공화당 지지층이나 보수주의자들 보다 환경문제에 일관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경제문제에 보호무역주의 지지자들은 민족주의적 문제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고립주의자보다는 강경주의자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과 유사한 성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국제주의자들과 공통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미국 학계의 여론과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는 통계학을 이

용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여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경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미국 학계의 경험적 분석은 궁극적으로 여론에 대한 알몬드-리프만의 주장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면서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 III. 여론과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방향

여론과 외교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국제정치 연구에서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핵심적인 논점은 외교정책은 엘리트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야 국가의 이익을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과, 외교정책에도 대중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갈등을 방지하고 협력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는 여론의 본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론은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형성되므로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여론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정서이론(mood theory)에 대한 찬반 논란이 주를 이루었다.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특히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단순 서술통계를 이용하거나 여론조사와 인구통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였다. 여론조사 자료가 축적되자 시계열 분석을 통해 여론의 변화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여론의 일관성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고, 설

문문항을 추가하여 구조분석(structural analysis)도 수행함으로써 여론의 일관성과 구조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방법론적인 진전이 이론적 발전을 지원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학계에서 여론과 외교정책의 논의도 미국과 유사한 흐름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처럼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는 군사적 개입과정과,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8년 6개월간 연인원 31만여 명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지만 당시는 여론의 관심이 가시적으로 외교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국내정치상황이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정치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내여론도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국내정치상황이 전개되자 여론의 관심이 증대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국군의 파병사례도 증가하게 되었다. 1991년 걸프전 때는 국군 의료지원단과, 공군 수송단이 파병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했다.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 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와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가 파병됐다가 2007년 여름 대규모 한국인 피랍사태로 인해 그해 12월 모두 철수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에는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와 의료지원단인 제마부대가 파병됐고, 민사작전부대인 자이툰부대와 공군수송부대인 다이만부대가 파병되어 2008년 말까지 임무를 완수했다. 이 밖에도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는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것을 시초로 1994년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단, 1995년 앙골라에 야전공병단, 1999년 동티모르에 상륙수부대 등이 있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군은 13개국 15개 지역에 716명이 파견돼 PKO 활동을 벌

이고 있다. 부대 단위로 파병된 PKO 참여는 레바논과 소말리아 해역에 2007년과 2009년 3월 각각 파병된 동명부대와 청해부대 2개이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359명이 활동하고 있고 청해부대는 298명이 상선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다원화를 경험하면서 외교정책에서 국군의 해외파병과 같은 주권과 관련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무역, 문화, 기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여론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인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군의 파견, 자유무역협정, 영토문제, 자원외교, 대북정책 등 무수한 정책분야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대외정책에 대한 다양한 여론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여론과 대외정책에 대한 기존의 규범적 연구가 많은 편이고 일부 실증적 연구는 대북정책에 제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론과 외교정책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 의견의 합으로서 여론, 특히 외교정책과 관련한 여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양한 대외정책 분야에 대한 의견을 ‘한국인의 평화관’이라는 주제로 포괄하여 우리 국민들이 외교정책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의견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한 및 주변국관계를 포함한 안보, 경제, 인권, 환경, 국제기구, 다자협력 등 다양한 정책주제에 대한 논의를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수행했던 바와 같이 외교정책이 여론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로서 여론이 합리적인가,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의 여부 자체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본 연구는 알몬드-리프만의 합의에 대한 이론적 공방은 일단락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한적이거나 합리성과 안정성이 있는 여론이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대외 정책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간주하고 여론의 방향을 조사함으로써 대외정책에 대한 안내 또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외 정책과 여론을 다룬 기존연구가 수행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여론 조사의 대상을 북한과 파병처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몇 가지 정책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안보, 금융, 무역, 기여외교, 국제기구, 환경, 북한, 핵개발 등 다양한 외교정책 분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었는지를 ‘한국인의 평화가치관 연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한다. 평화에 대한 가치관은 기존의 여론조사가 가치관에 대한 조사(value survey)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대외정책에 대한 가치관 조사라는 점에서 대외정책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해야한다는 규범적 입장에서 ‘평화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2장|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호관계



## 제2장

# 외교정책과 여론의 상호관계

### I. 여론에 대하여

여론은 민주화의 산물로 18세기 유럽의 정치에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나타나면서 대중이 주요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의견(mass opinion), 공동의 의지(common will), 일반의지(general will) 등으로 정치과정에서의 주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대중의 개념은 서유럽국가의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 및 사회세력의 부상과 더불어 구체화되었다. 민주주의 초기에는 정치적 경쟁의 형태로 정치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다수결 체제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대중의 생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론에 대한 정치철학적 개념은 벤담(J. Bentham)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었

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의 정의는 “특정 주제에 대한 개인의 태도, 행위, 신념, 의견의 사회적 축적”을 의미한다. 여론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개념정의는 “개인들이 가지는 의견으로서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Key 1961, 14). 여론은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과 결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어진 사회 집단에 소속된 대중의 공통된 의견으로 단순한 산술적 집합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의 집적이며 종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여론은 복잡성, 다양성, 종합성 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의가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Harwood 1965). 개념정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한 나라의 정책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형성과 여론의 정책 반영은 중요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다.

민주주의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개념으로 요약되고 이러한 정부형태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결정되고 수시로 국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보면 여론은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이다. 하지만 대중의 의견인 여론이 정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첫째는 대중의 특성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중은 정책과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정책이나 정책제안에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둘째는 정책의 특성상 여론의 선호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하여 시민의 책임이 수반되는 대외정책의 경우 다수의 여론은 반대의견을 표명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여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 중에는 미국의 낙태문제, 한국의 북한지원 문제와 같이 여론의 찬반이 대등하게 나뉘어져서 대립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론의 선호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중추수주의(populism)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엘리트 민주주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대중은 정보가 없고, 근시안적이며, 감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 특히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중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를 선출하여 대중을 대변해서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선택하였다. 엘리트 민주주의 이론을 따르더라도 대중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표가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력과 정책결정의 정당성은 대중의 정치적 지지,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 투표의 득표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정책과 대중의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이론적 고려의 대상이다.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이 통합되어 비약적인 기술적 진보가 가능해진 현대에 와서는 외교정책을 포함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론의 중요성 자체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론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여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공정 영역에 대한 관념을 발전시켰는데 여론은 일반적 접근, 이성적 논쟁 그리고 신분에 대한 무시를 기초로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서구 민주주의에서 여론은 정치 엘리트의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론에 대한 이론적 시각의 차이는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중의 의견인 여론과 정치적 엘리트들이 가지는 생각은 분리되

어야 한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는 피지배자의 동의에 근거한 정부라는 점에서 여론은 관심의 대상이 된 점이 있지만, 여론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버크(Edmund Burke)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는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지만 국민의 의지에 반드시 순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대중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성패는 공공의 정책이 대중의 여론에 순응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여론과 정책결정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중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의 논쟁이다.

정치 분야에서 여론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확립된 시점에서 여론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대중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전제군주 체제에서도 정치권력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과 평가는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여론이 정치과정에서 분석적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확립되면서부터인데 특히, 여론과 정치의 상호관계의 연구는 정치과정 중에서 선거와 투표가 중심을 이루었다.

여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론의 분포에 대한 계량화 작업, 둘째, 다수의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는 과정, 셋째, 공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의 역할, 그리고 넷째,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하는 미디어의 역할 등이 주요 연구의 대상이었다. 정치학 연구에서 여론의 동향은 정책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국제관계연구보다는 국내 정치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주요 연구대상이었다.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동향도 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이 중에서 여론의 특성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어왔다.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상관관계에 있어 전통적인 논의는 국제관계의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의 선호에 따라 대별되어 왔다. 현실주의의 입장은 여론의 영향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고, 이에 반해 자유주의 시각은 여론의 긍정적 영향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여론에 대한 쟁점은 알몬드와 리프만의 합의(Almond-Lippmann Consensus)로 대변되는 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론은 변화가 심하고 비합리적이다. 대중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유가의 급등 원인이 중동지역의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강력한 대응을 원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파병되어야 한다면 유가의 급등은 용인할 수 있다고 선호를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여론은 논리적 구조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무관심은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귀결되며 정보와 지식의 부족은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여론의 특성은 변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정책에 있어서 대중은 정부가 세율을 높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정부지출의 증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특정 시점에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대중의 정책적 선호는 본질적으로 적자재정을 선호하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선호체계를 보여준다.

셋째, 여론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 앞에서 논의한 여론

의 특성의 연장선에서 여론의 판단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론의 주체인 대중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엘리트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인 정치인 또는 엘리트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뜻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Cohen 1973).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여론이 가지는 취약점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여론의 고유한 취약점으로 불명확성, 격분과 망각, 번덕성, 조잡성, 간섭성, 독단성, 감정성, 비과학성, 도피성, 보수성, 낮은 신뢰성, 다양성, 정치와 야합, 오염성의 14가지의 특성을 들고 있다(홍득표 2004, 266-268). 여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의 결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여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책결정자들은, 국가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대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과 국내집행과정에서 항상 여론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교정책 결정에 대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알몬드-리프만의 합의에 대하여 일부의 학자들이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론은 즉흥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명제에 대하여 여론조사 자료를 추적하고 이를 시계열 분석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논리적 일관성을 찾아냈다(Hurwitz and Peffley 1987; Page and Shapiro 1992; Mayer 1992; Peffley and Hurwitz 1992).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하나의 단위체로 볼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며 여론의 추이가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변화가 발생할 만한 논리적 이유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외 정책에 대한 지

지와 선호가 변화할 때는 이에 상응할 만한 전쟁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와 같은 국제적 사건과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Page and Shapiro 1992; Mayer 1992). 이들 연구에서는 여론을 하나의 집합체로 보고 사건의 전개와 여론의 변화를 추적하였다는 점에서 특정 개인의 견해와 선호가 변경되는 논리적 일관성을 선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혼동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은 사회과학 연구의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둘째, 여론의 논리적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 대중이 외교정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신념체계와 판단은 일관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중은 특정한 국제적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세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순화된 형태의 판단을 의미하는 인지적 지표(cognitive shortcuts)를 통해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일관된 평가를 한다(Holsti 1996, 51). 외교정책의 신념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앞에서 설명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그리고 군사와 경제분야의 두 가지 차원을 결합하여 4가지 유형의 외교정책 신념체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일정한 성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Wittkopf 1994). 여론의 일관성에 관해서는 위계적 모델을 주장한 Hurwitz and Peffley(1987)에 따르면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는 핵심가치, 일반적 성향, 특정 이슈의 3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끝으로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여론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미국의 학계에서는 축적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결정과 여론의 향배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음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론조사에 관한 20년간

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의 방위비 변화에 영향을 준 변수로, 구소련의 방위비 변화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준 변수가 미국 내 여론의 변화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Hartley and Russett 1992). 이 밖에 외교정책뿐 아니라 일반적 공공정책의 결정과 여론의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1960년부터 1974년까지 공공정책과 여론의 선호에 대한 분석결과 일반정책의 67%, 그리고 외교정책의 92%가 일관된 방향에 있었음을 밝혔다(Monroe 1979).

여론과 정책결정 사이에 일관된 방향성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호 관련성 또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된다. 즉, 문제는 여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외교정책과 여론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정책결정자들이 대중의 의사인 여론을 조작한 결과인지 여론이 정책결정에 반영된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 II. 여론조사에 대하여

### 1.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문제점

현대는 여론조사의 시대이다. 인터넷이 주요 매체로 부상되면서 여론조사는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로는 단순한 흥미를 위한 여론조사도 다수 이루어진다. “여름휴가를 같이 가고 싶은 여자 연예인은?”, “대통령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연예인은?” 등과 같

이 오락적인 설문조사도 있다. 이러한 설문을 통한 여론조사는 여론을 흥미의 대상으로 언론이 활용하는 사례이다.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상수도 정책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도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실태를 조사하는 설문은 행정부처가 자신들의 정책성과를 홍보하거나 정책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여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과거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58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시 현역 상원의원이었던 더글러스와 경쟁을 벌인다. 당시 더글러스와 많은 논쟁을 벌였는데 링컨은 “대중의 정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 어떤 실패도 없지만,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다.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람만이 법령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링컨은 당시 더글러스와 논쟁을 하면서 노예제도를 ‘악의 제도’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예제도 반대론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다. 하지만 1861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규모 농장과 노예노동에 기초를 둔 남부에서는 ‘노예반대론자’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상하지 못한 남북전쟁으로 귀결되었다. 비록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대중의 정서가 정치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링컨뿐 아니라 모든 정책결정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공화정이 아닌 왕정을 택했던 우리의 조선왕조에서도 역대 왕들과 정치 엘리트들은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대중의 정서를 정책결정과 정책

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하였었다. 결과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반영이 정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여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2008년 5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던 촛불시위는 인터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0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여론의 반대를 보여준다.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국민 23명이 피랍되었다가 2명이 살해되고 21명이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풀려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은 그해 연말 현지에서 건설과 의료를 지원하던 다산부대와 동의부대의 철수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외교정책의 최종결정이 여론과 일치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된 국가에서의 외교정책에 있어 여론의 방향이 정책결정과정과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행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흥미위주의 조사이든, 이미 결정된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이든, 여론의 의도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이든, 여론조사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이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여론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또한 일반 대중 사이에 여론조사는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결

과가 무엇이든 여론조사가 기초해 있는 설문방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회의의 대상이며, 사회과학연구에서 설문은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여론조사도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일관성이 없다. 현대 정치에서 여론조사의 대상이 되는 무수한 정책이슈들이 있는데 일반 대중은 이렇게 많은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문장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문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영세민의 지원 확대’ 그리고 ‘환경문제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반면, ‘군 복무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의 증액’ 그리고 ‘집회의 자유 제한’과 같은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 잡지, 영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80%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반면 동일한 대중을 대상으로 “당국은 포르노라고 생각되어지는 잡지나 영화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65%가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여론조사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설문에 대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고려를 거쳐서 대답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 대중은 이념적 성향에 있어서 상당히 고정된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나 설문에 대답할 때는 심각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대중은 설문에 대응할 때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동

일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하면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한다.

이슈의 중요도가 여론의 반응을 유도하고, 반응의 성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을 가지는 주요 정책이 여론의 반응을 보다 많이 유도한다. 사람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주요 대중매체에서 주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대중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관심으로 인해 더 강력하고 일관된 의견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치과정에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주요 이슈는 실업이나 물가와 같은 경제적 이슈가 차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주요 이슈는 변화한다.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 안보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지만,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하면 환율이나 물가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학교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 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가 주된 문제가 된다. 정책의 주요 이슈는 정치 상황의 변화, 언론의 보도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 2. 여론조사의 구조와 방법

표본조사(survey research)는 연구자가 연구의 대상이 된 개별 표본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며 이는 전체 모수집단(population)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모수통계조사(census)와 대비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표본조사 방법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및 경영학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 널리 적용·발전되어 왔으며 사회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표본조사는 20세기 초·중반을 걸쳐면서 사회과학과 공공정책 발전에 힘입어 지대한 발전을 이룩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표본조사기법이 사용되면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사회과학에서 표본조사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다면성(versatility),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 때문이다. 사회과학 표본조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면성(versatility)이다. 표본조사 기법이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거나 이에 관련된 가설을 검증하는데 최선의 이상적인 기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 설계된 표본조사기법에 근거한 자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고된 몇 가지 표본조사의 결과는 정치·사회·경제 문제의 초점을 정확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2003년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2년 출산·사망통계 결과’의 신생아의 성비에 관한 자료가 있다. 성비는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의 숫자를 표시한 것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106.5, 둘째 아이의 경우 107.3, 그리고 셋째 아이의 경우 141.2로 급증한 통계가 나타나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생아의 경우 셋째는 남아선호사상에 근거하여 부모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출생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본조사가 인기 있는 이유는 표본조사의 설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효율성(efficiency) 때문이다. 표본조사를 수행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직접인터뷰, 우편조사, 전화조사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우편조사의 경우 한 개체당 실제 조사비는 2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며, 전화조사의 경우도 설문지의 길이와 장거리 전화비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

만 기본적으로 개체당 실제 조사비는 1,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직접방문인터뷰의 경우 동일한 개체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할 경우 우편조사나 전화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설문에 훈련된 인력이 직접 피설문자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비용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을 설정할 때 2,000개의 개체를 가지는 경우 자료의 신뢰도가 극대화되며 그 이상 표본숫자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신뢰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신뢰도가 있는 조사를 수행하려면 우편조사의 경우 40만 원의 비용이, 전화조사의 경우 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결과이다.

표본조사가 모수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모수집단을 대표할 가능성 즉,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이 있다는 점이다. 표본의 일반화 가능성이 연구의 핵심목표라면 표본조사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사실상 표본조사가 거대한 모수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많다.

### 1) 우편 설문

표본조사는 우편조사와 인터뷰의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논의하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화설문조사방식의 적절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본조사방식 중에서 우편조사방식은 익명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조사방식으로 익명의 조사방식에 근거한 자료의 수집이 유용하다.

우편조사방식의 최고의 장점은 경제성에 있다. 우편조사에는 설문이나 인터뷰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설문비용이 작게 든다. 실제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설문항목의 설계와 작성, 표본 추출, 그리고 복사, 우편발송, 반송봉투제작 및 설문응답자의 우편반송비용이 전부이다. 일단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다른 조사방법에 비해서 싸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자료의 처리에 있어서 최근에 발달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한다면 빠른 시간에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다.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경우에 우편조사 방식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최고의 장점을 가진다.

다른 인터뷰나 전화설문방식에 있어서는 설문자의 기술이나 인격적 측면에 따라서 응답자의 대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에 반해 우편조사방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인터뷰요원이나 설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의 익명성이 최대로 보장될 수 있다. 응답자와 대면하여 설문자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제기할 경우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응답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질문의 내용이 숙고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개인의 신상정보나 주위 사람의 의견과 관련된 경우일 때, 설문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편 설문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장점이 있다. 우편 설문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설문자에게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직접설문의 경우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된 표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경우 동반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편 설문이 선호된다.

우편 설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때로는 단점을 동반하기도 한다.

우편 설문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낮은 응답률에 있다. 응답률이란 최초 의도한 총 표본 숫자에 대한 설문을 완성하는 표본의 숫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실제 우편조사에서 응답비율은 직접인터뷰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우편 설문은 개인인터뷰에 비해 응답률이 1/3 또는 1/4 수준에 그친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항상 비응답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응답자의 경우 응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크게 나누어 자발적 미응답·비자발적인 미응답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자발적인 경우는 응답자가 교육수준이 낮거나 노년이어서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완성하여 반송할 수 없는 경우나 이사나 여행 등 이동 때문에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발적인 경우는 자료의 신뢰도에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주어진 설문문의 내용에 대해 응답자가 반감을 가지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구자가 비응답자가 응답을 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편질문에 있어서는 설문내용이 복잡한 경우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문내용은 가능하면 정확하고, 직설적이며, 단순해야 한다. 우편 설문문의 본질적 한계는 응답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단 설문문이 도착하면 그 자체로서 최종적인 응답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확인이나 애매한 응답을 확인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연구자가 응답자의 환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실제 의도한 응답자가 설문에 응했는지 제삼의 사람이 응답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수집한 자료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2) 인터뷰 설문

우편 설문에 대응하여 설문자료를 조사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 개인 인터뷰인데 기본적으로 대면적 관계에서 설문자가 연구가설에 근거한 설문내용을 응답자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피설문자의 응답을 기록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여기에는 인터뷰의 형식과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구조적으로 계획된 인터뷰에는 융통성이 가장 적은 인터뷰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질문의 순서나 질문의 내용은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피설문자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설문자는 질문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질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인터뷰 과정에서 질문이 행해지는 순서도 질문서에 나온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질문의 순서나 질문자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구조적으로 계획된 인터뷰 방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계획된 인터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응답자들은 동일한 수준의 어휘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어진 질문서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응답자들에게 모든 질문 내용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재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문항의 의미가 개별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이해된다면, 질문서가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서 내용도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문항들이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배열순서도 동일해야 한다.

둘째, 집중적 인터뷰는 비계획적 인터뷰·비구조적 인터뷰 또는 집중적 인터뷰라고 한다. 이 인터뷰 방법의 특징은 특정 경험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행하고 인터뷰 이전에 분석된 상황에 관련하여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가설에 관하여 특정된 주제에 관련된 기초에 근거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연구하려는 상황에 관련한 피설문자의 경험에 중점을 둔다. 비록 인터뷰 대상과 설문자가 만나는 상황이 구조화되어있고 연구의 주요측면이 설명되어 있지만, 응답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개념정의를 표현할 자유가 주어진다. 집중적 인터뷰는 연구자에게 개인적 반응이나 특정한 감정과 같은 세부사항을 획득하도록 해준다. 동일한 상황을 연구한 설문자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자료의 미비점이나 비일관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셋째, 가장 유연한 형태의 개인 인터뷰는 비구조적 비방향성 인터뷰이다. 이 설문에서는 설문자가 미리 작성된 질문서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정한 순서에 따라 질문할 필요도 없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응답자는 그들의 경험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이나 성향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설문자는 설문기간 동안 다양한 영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질문도 임의로 제기할 수 있다.

개인 인터뷰의 장점은 우선 유연성에 있다. 인터뷰는 설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되며 구조화되지 않은 설문일수록 훨씬 많은 유연성을 가진다. 인터뷰의 종류에 따라서 설문자가 질문의 내용이나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고, 추가의 정보나 세부내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인터뷰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연구자가 인터뷰하는 상황을 완벽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문자가 설문내용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 먼저 질문해야 하는 내용과 나중에 질문해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이 진행되는 과정을 비밀로 함으로써 설문되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대답을 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설문이 행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연구자가 설문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설문이 진행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서 응답자의 대답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의한 설문은 우편에 의한 설문보다 응답률이 높다. 대면 접촉과 직접 대화를 통한 인터뷰과정에서 설문자와 관련한 부가적인 정보를 설문이 아닌 관찰을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뷰의 단점은 우편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터뷰 요원을 훈련시키거나 고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상당하다. 특히 비계획적 인터뷰·비구조적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는 인터뷰 요원을 활용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인터뷰는 유연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 장점에 비해서 인터뷰 진행자의 개인적 선입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가 가지는 가장 취약한 점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응답자의 이름, 주소, 소속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신분의 노출이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왜곡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화 인터뷰 또는 전화 서베이는 앞에서 말한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적 접촉을 통한 인터뷰 기법이기는 하나 직접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전화 인터뷰는 전화가 보급된 이래 1950년대와 60년대를 전후해서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었고, 한국에서도 현재 선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표본 추출에 다양한 편견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전화가 처음 보급되었을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부와 소득을 보유한 가구만이 전화를 보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화 인터뷰는 경제적으로 상류계층을 주로 표본으로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1965년 전화 보급률은 100명당 0.8대였고, 1980년에는 7.1대로 그리고 1988년에는 24.6대로 가파른 성장을 하였다(한국전기통신공사 1988). 이동전화가 보급되면서 유선전화의 보급비율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동전화 보급은 1984년 3,000명에서 2007년 4,350만 명으로 1만 4,499배 급증하여 2010년 3월 기준으로 인구대비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유선전화를 통하여 피설문자의 거주지를 통제하는 방식의 설문은 구조적으로 표본 추출에 있어 오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설문이 수행되는 시간도 표본 추출에 구조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수반한다. 평일 낮 시간에 실시되는 설문은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젊은 세대를 배제하고 주부나 노인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를 과도하게 표본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표본 추출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전화를 통한 설문 자료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조사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평가되어 왔다. 오늘날 한국에서 전화 인터뷰를 사용할 때 표본 추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은 앞에서 말한 이동전화의 보급과 이에 따른 유선전화의 감소 그리고 기존의 지역번호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전화의 보급 등이 젊은 세대의 가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응답자가 논의하기 꺼려하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할 경우 인터뷰가 중단되는 어려

움이 발생한다는 점도 치명적 약점이다. 응답자가 전화수화기를 내려 놓는 순간 자료수집 자체가 무위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인터뷰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기 선택의 오류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최근 들어 잦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응답자들이 인터뷰의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을 하게 되었다. 전화 인터뷰를 실시할 경우, 인구통계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설문을 실시할 때 성별, 연령대 등을 문의하는데 노년층의 표본은 쉽게 충족되기 때문에 배제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을 응답자가 알고 자신의 연령을 낮추거나 높여서 응답함으로써 표본에 포함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전화 인터뷰의 치명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호되는 이유는 경제성과 신속성에 있다. 전화 인터뷰는 대면 인터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화로 인터뷰를 실시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료를 수집하는 즉시 데이터로 작성할 수 있다는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전화 인터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면 접촉은 하지 않지만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로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화 인터뷰는 표본 추출에 구조적인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신속성,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과 같은 장점이 있어서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특히 전화설문은 설문내용을 구조적으로 설계하면 양질의 자료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전화 인터뷰가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상황을 최대한 통제하여 적절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설문

의 구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3) 설문의 구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인구통계를 제외하고 전체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의 19개의 설문은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직접적인 선호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1) 매우 관심(매우 찬성), 2) 다소 관심(다소 찬성), 3) 보통, 4) 다소 무관심(다소 반대), 5) 전혀 무관심(매우 반대)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설문은 정책의 이슈를 경제, 대외정책, 범죄예방, 인권과 민주주의로 나누어 여론의 관심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설문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방비 지출에 대한 여론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영토주권의 보전을 위해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공정에 대해 중국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주국방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문을 통해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에 있어 여론의 선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와 무역에 대한 여론에 두 가지 설문을 제시하였다. 우선 자유무역에의 제한에 대한 여론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부과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장을 제시하고 여론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

상하는 자원안보와 관련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국의 비민주적 정부와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문장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대 국가를 설득하는 힘으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연성국력(soft power)과 이에 부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여외교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우리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개발도상국의 질병과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대외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의 공헌에 대해서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설문을 제시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보다 많은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문을 제시하여 북한 지원에 대한 남한의 여론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국군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쟁지역 평화를 위해 유엔 요청 시 평화유지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보편적 가치의 추구하고 관련한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이종국적 문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민권 부여 문제 등을 설문하였다. 먼저 지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적극적 역할에 대하여 “기후변화 같은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해

야 한다”는 설문을 제시하였다. 국민의 의무 및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와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방의무의 이행과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와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설문을 제시하였다. 남성이 부담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여론의 반응이 민감하다는 점과 외국인 배우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면 두 가지 설문이 정확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된 설문이다.

다음으로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변국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보기로 제시하여 이 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국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응답자 본인이 평가하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중도, 다소 보수, 매우 보수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제 3 장 |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서술적 분석



## 제3장

###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서술적 분석

대외정책은 여론의 관심에 있어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국제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국제관계의 현실 앞에서 한 나라의 정책이 일반 대중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국가 차원에서 논의하자면 대외정책과 관련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특성을 한 국가의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는 국제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외정책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와 공동으로 2010년 7월 9일(금)~11일(일) 한국인의 평화가치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국민들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관, 평화관, 인권관 등을

조사하여 참고자료로서 그 유용성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하였고 오차의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pm 3.10\%$ 이다.

## I. 정책의 관심

여론이 대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과 관련하여, ‘기회비용이론(domestic cost theory)’은 국제적인 대외정책의 활동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국내정치에 대한 기회비용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였다(Ninic 1997). 국내정치비용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여론은 대외정책에 대해 일관된 성향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론이 국제정치에 대해 표명하는 관심과 지지는 국내 상황과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대한 강조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이 연두교서나 연설을 통해서 대외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는 경우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대중들은 정치를 위한 가용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문제에 재원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외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재원이 대외정책에 사용되는 만큼 국내문제가 악화된다고 보았다.

여론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 정책이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외교정책에 관심을 기울인다. 미국의 사례에서 국내정치의 기회비용은 실업과 물가가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여 대외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실업과 물가는 악화되는 것으로 보았다(Ninic 1997). 이는 다시 말해서 여

론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외교문제보다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임을 의미한다.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의 우선순위 맥락에서 설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론의 성향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정책을 외교와 경제로 양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경제, 외교, 사회적 안전, 정치적 민주주의로 대별하는 네 가지 정책영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설문 방식도 상호배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표명하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기전망에 대하여 (1) 매우 관심 있다, (2) 다소 관심 있다, (3) 보통이다, (4) 다소 관심 없다, (5) 전혀 관심 없다는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정책영역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가중치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책에 대한 여론의 상대적 관심을 평가하였다. 상호배타적으로 설문을 구성하게 되면 여론의 관심을 구조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원의 정책별 사용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상호배타적 성격을 가지지만, 정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설문자가 정책별 선호를 배타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설문을 구성하면 구조적으로 기회비용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다른 정책은 지나치게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하다 하겠다. 설문의 순서에 있어서도 경제, 대외정책, 범죄예방, 인권과 민주주의 순으로 배열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여론의 관심의 순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무작위 방식으로 배치하여 여론의 관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은 정책 이슈의 중요도를 가중평균치 기준으로 보면, 범죄예방(28%), 경제문제(24.9%), 인권 및 민주주의(24.3%), 그리고 외교정책(22.8%)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의 관심은 실질적 필요와 정책의 만족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거시경제 지표가 낮을수록 여론은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질수록 경제보다는 삶의 질에 관련된 환경이나 인권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Clarke and Dutt 1991; Clarke et al. 1999). 이러한 결과는 특정 정책에 대한 높은 여론의 관심은 현실생활에서 높은 중요도와 더불어 낮은 정책적 만족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회비용이론이 주장하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임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분석으로 평가된다.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2010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아동 성폭행범죄의 빈발, 부녀자의 납치, 성폭행,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흉악범죄의 빈발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정책적 만족도가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정책분야별 선호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외교정책에 대해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외교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중요도는 낮고 정책적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반면 인권과 민주

주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 분야와 비교해서 중요도는 높고 정책적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여론의 관심은 범죄예방, 경기전망, 인권과 민주주의, 외교정책의 순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과 대외정책의 관계는 기회비용이론의 주장과 일관된 성향을 보여 주는 것이다.

## II. 안보정책과 여론의 관심

외교정책의 핵심은 주권, 영토, 국민으로 구성되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국방예산의 지출에 대한 여론의 평가, 영토보전과 관련한 여론의 대응, 그리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동맹국가인 미국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안보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국방비 지출확대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 반응(58.3%)을 보인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소수(12.5%)에 그쳤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여론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시카고 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55%가 지지하고 있다

(Bouton 2006). 과거 냉전시대의 여론조사를 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냉전시대의 미국의 국방에 대한 여론은 소련의 군사력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1982년 49%, 1986년 53%, 1990년 56%의 지지를 각각 보여 주었다(Reilly 1983; 1987; 1991). 이처럼 자국의 군사력에 대하여 약 과반수에 해당되는 여론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 영토관련 갈등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주변국과 영토에 대한 갈등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역사의식, 그리고 민족 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선호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독도문제와 중국과 관련해서는 간도가 포함된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영토 주권에 관해서 우리 국민은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91.7%의 응답자가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중립적 입장을 포함해 부정적 입장은 7.5%에 불과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3%가 강경대응을 지지한 반면, 중립적 입장 10.7%, 강경대응에 반대 3.1%로 나타났다.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동북공정문제와 관련한 중국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의 중국과 일본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역사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의 전환과 관련해서 43.7%가 ‘즉시 전환’을 지지하는 한편 20%는 유보적 입장을, 28.6%는 즉시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즉시 전환이라는 정책의 특성상 유보적 입장을 부정적으로 포함하면 48.6%가 전시작전권의 즉시 전환에 대해서

는 부정적 의견을 가진다고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방인 미국과 안보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에서도 건전한 외교관계를 설정해야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군사작전권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44%에 이르는 찬성여론은 우리 국민의 여론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선호하는 만큼 한국의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국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에는 71%가 지지하는 반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29%만이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에게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의한 군사적 공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는 53.5%에 해당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여론은 27% 정도라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 III. 국제경제와 여론의 관심

국제경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비민주국가와의 협력에 대한 입장을 설문하였다.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는 일반 시민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비재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것과 이런 조치를 제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여부에 대한 설문이다.

자유무역의 규제에 대한 정책적 선호는 응답자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수입관련 종사자는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를 받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호무역조치를 선호할 수 있다. 개별 응답자의 직종에 따라서 대답이 결정되지만 개인은 생산자로서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로서 입장도 있다. 예를 들면, 양돈업자인 응답자는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구매자이자, 자녀 교육을 위해 등록금을 지불하는 소비자,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라는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로서 개별 설문자가 생각하는 자유무역에 관한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한 입장은 의미가 있는 설문조사이다.

자유무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45%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14%가 반대 입장을 그리고 28%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응답자들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의 시각에서 대외 무역정책을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수출지향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규제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국내기업의 국내시장에 대한 보호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관련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12.5%의 응답자가 모름/무응답을 선택했다는 점인데 이는 다른 어떤 설문에서 나온 결과보다 비율이 높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일반대중은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국가 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고 무역에 관한 정책으로 인해서 다

양한 사회세력, 경제단체, 직업집단들 사이에 득실과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가 발생하는 등 국내 정치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무역정책에 대한 여론의 선호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대외정책이 국내정치와 연계되는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국제경제와 관련하여 여론의 관심 중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자원외교에 대한 시각이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적어서 에너지를 포함한 지하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대정부의 홍보구호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원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원외교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의 일환으로 취급되기도 할 만큼 정책적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구축이 핵심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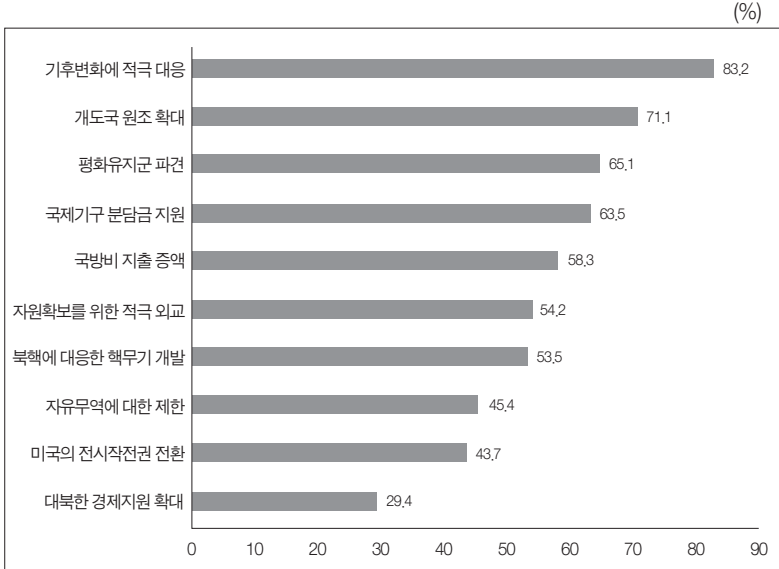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는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한 후 카자흐스탄 잠빌 해상광구 지분 확보를 자원외교의 성과로 홍보하는 등 해외에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의 비민주적 정부와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문을 실시하여 여론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54.2%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의 비민주적 정부와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을 포함한 반대는 38%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적극적 반대는 16% 정도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 정도는 외국의 민주

주의보다는 자원 확보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응답자의 16%는 자원의 확보보다는 해당국가의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경제적 실익보다는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보편주의적 가치와 여론의 관심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보편주의적 성향에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개도국 원조 확대, 평화유지군 파견,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와 같은 분야에서 높

〈그림 1〉 외교정책 이슈별 여론의 선호도



은 수준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삶의 질이나 국제 평화와 같은 국제적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 조사의 결과는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선호는 항상 동일한 방향의 선호를 가지는 이슈(valence issue)로서 성격을 가진다.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개도국에 대한 지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의 파견,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에서 재정적 부담의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정책목표에 대한 여론은 응답자들 사이에 특별히 거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문을 받을 당시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이슈(position issue)가 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여론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답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역할 수행에 83.2%가 찬성, 12.1%가 유보, 14%가 반대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확대에 관해서는 71%가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동의가 58.3%에 그친 반면,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에 대해서는 63.5%가, 그리고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서 65%가 지지했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유사한 설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제공에 대해서는 81%가 찬성, 10.7%가 유보, 6.3%가 반대했다. 이 결과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공선을 위한 정부의 보편주의 정책성향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부여에 대해서는 58.9%가 찬성, 20.1%가 유보, 18.2%가 반대했다. 국방의무와 관련한 이중국적 부여에 관해서는 22.5%만이 찬성을 그리고 과반수가 넘는 53.2%가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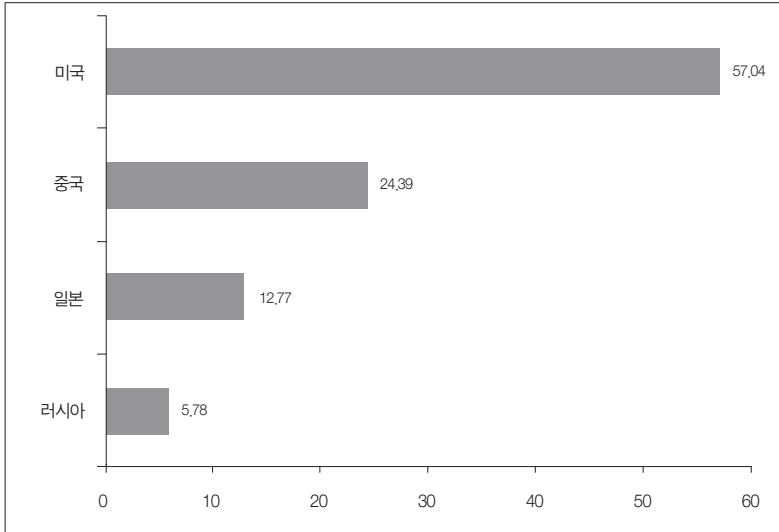
이 결과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원조, 평화유지군 파견, 국제기구 분담금의 지원과 같이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밖의 국가에 대해서 지원의 성격상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제공과 같은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국적의 부여와 같이 물리적으로 외국이 아닌 국내에서 국적이거나 국방의 의무와 같은 법적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시 정리하면, 한국의 여론이 국외에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보편주의적 가치에는 개방적인 반면, 국내에서 법제도와 관련한 국적 부여와 국방의 의무와 같은 보편주의적 가치에 있어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 V. 주변국에 대한 여론의 인식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설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의 안보(경제)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를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라고 설문하고, 보기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제시하였다. 1순위에 2

〈그림 2〉 한국의 안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 순위

(%)



점을 2순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가중치를 합산하여 각각의 국가가 차지하는 점수를 전체점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별국가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미국은 안보(57.04%)와 경제(47.5%) 두 분야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안보에서 24.4%, 경제에서 36%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이 절대적 중요성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로서 한때 이념적 유대를 가졌던 일본의 경우 안보 측면에서는 12.7%,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11.7%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러시

아는 안보에 5.78%, 그리고 경제에 4.14%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3개국의 국제관계에서 역학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안보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을 협력의 파트너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해가 더 압도적이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역학관계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국제문제로 인식된다. 우리의 국방력이 북한을 능가한다는 것만으로 한반도 안전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국방이라는 개념보다는 한미동맹이라는 동맹관계의 공고화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각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인식을 달리한다는 점은 있지만 여론의 상당수는 한국의 안보에 미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안보협력의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24%에 해당하는 점은 안보관련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응답은 현실로 나타나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역할강화로 나타났고,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태호 2008, 102). 한중관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논의되는 ‘중국 위기론’ 또는 ‘중국 기회론’이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강화와 맞물려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중요성은 중국이 대북한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사실상 북한의 후견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 핵개발과 같은 안보문제 해결에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

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중요성과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5.8% 정도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미상환금 13억여 달러 중 7억 달러가량을 군사장비와 군사기술협력으로 돌려받는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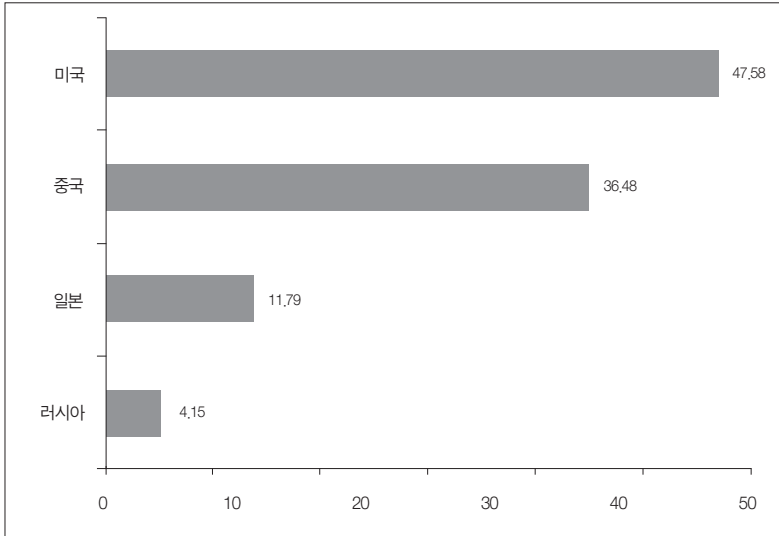
안보문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협력은 12.7%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구축되어 있는 동아시아 안보환경에서 미국의 전략방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안보목표를 공유해왔다. 1991년 부시-미야자와의 미·일 정상회담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안보경비의 분담에서 한발 나아가 역할 분담 또는 책임 분담을 논의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물론 여론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상정하는 미일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일동맹이 전통적으로 일본 방위, 한반도 전쟁억지, 중국견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

---

\* 불곰사업은 한국이 1991년 당시 소련에 제공한 14억 7,000만 달러의 경협차관의 일부를 현물로 들여오기로 하고 95년부터 추진한 러시아 무기도입사업이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1차 사업을 통해 T-80U, BMP-3, 휴대용 대전차유도탄 METIS-M, 휴대용 대공미사일(IGLA)을 도입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차 사업으로 T-80U, BMP-3, METIS-M, 공기부양정, IL-103, KA-32A를 들여왔다.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1차 사업은 경협차관 상환으로 충당했고 5억 3,400만 달러 규모의 2차 사업의 경우 절반은 경협차관, 절반은 현금으로 지불했다. 3차 불곰사업의 쟁점은 기술이전과 최신형 완성장비 도입 문제였다. 양국은 이를 위해 2007년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장비와 기술이전 목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진을 계속해 왔다.

〈그림 3〉 한국의 경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 순위 (%)



를 우려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중심에 있고 일본과는 제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의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여론의 평가가 나타났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도는 57%였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도는 47.6%로 감소한 반면, 안보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도는 24.4%였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도는 36.5%로 증가하였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러시아의 중요도도 각각 11.8%와 4.2%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경제문제에 있어

서 중국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은 확대발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 대상 국가가 됐고, 2002년에는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됐고, 2003년에는 최대 교역국이 됐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의 증가는 수출 다변화라는 점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켰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 국적 기업의 대미 수출 생산기지로 역할하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체제 아래에서 한국의 대 중국 교역량의 증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의 통로로 활용된다. 이런 현실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의 교역량의 증가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의존도에 큰 변화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변국 중에서 일본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한 다변화보다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를 반영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경제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전략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국가의 협력 파트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념적 동질성,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경험과 배경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위상 또는 국력을 의미하는 경제 규모가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여론의 반응은 국력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위상에 따라 협력의 파트너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주요국가의 경제 규모를 검토해보면 미국의 독주와 중국의 부상과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부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침체로 나타난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

〈표 1〉 국가별 GDP 규모 (단위 USD)

국가/연도	1970	국가/연도	1980	국가/연도	1990
1. 미국	1조 250억	1. 미국	2조 7,689억	1. 미국	5조 7,572억
3. 일본	2,029억	2. 일본	1조 552억	2. 일본	3조 182억
7. 중국	915억	11. 중국	1,894억	9. 러시아	5,168억
34. 한국	89억	27. 한국	638억	11. 중국	3,569억
15. 한국				15. 한국	2,637억
국가/연도	2000	국가/연도	2005	국가/연도	2008
1. 미국	9조 7,648억	1. 미국	12조 3,641억	1. 미국	14조 933억
2. 일본	4조 6,674억	2. 일본	4조 5,551억	2. 일본	4조 9,108억
6. 중국	1조 1,984억	5. 중국	2조 2,359억	3. 중국	4조 3,270억
12. 한국	5,333억	8. 한국	8,448억	7. 러시아	1조 6,794억
18. 러시아	2,597억	9. 러시아	7,645억	13. 한국	9,291억

자료출처: World Bank data

면 1970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1조 250억 달러로, 독일에 이어 일본이 2,029억 달러로 3위, 그리고 중국이 7위로 915억 달러, 그리고 한국은 89억 달러의 34위를 기록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1990년까지 미국의 독주에 일본이 추격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시기를 경험했고, 2000년 이후 중국이 부상하여 일본을 바짝 추격하여 결국 2008년을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는 별 차이가 없고 결국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 경제 규모 면에서 2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1990년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중국을 앞질러 9위를 기록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경제 규모 면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5년에 러시아는 한국을 추격하여 2006년부터 전체 규모 면에서 한국을 추월하였다. 러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국내 경제와 산업기반의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취약성을 가진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의미에서 한국의 주요 협력의 대상으로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수행한 여론조사는 바로 GDP의 형태로 표현된 개별 국가의 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1/10, 중국은 1/6.5, 일본은 1/6.5, 러시아는 1/1.5에 해당한다.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협력 파트너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국가의 경제 규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본에 대한 평가이다.

안보에 대한 주요 협력대상으로서 일본은 12.8%의 지지를 얻은 반면 경제에 대한 협력대상으로서 일본은 그보다 낮은 11.8%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 조사결과와의 차이가 1% 정도로 근소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보유한 국가로 군사력의 사용에 미·일동맹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의 군사안보 측면에서 제약은 역설적으로 안보비용을 절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전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 버블붕괴에 따른 장기불황 이후 일본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09년에 들어서면서 GDP 총액 기준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

일본의 경제적 상황의 반영이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의 반응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위대라는 형식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위대는 총 병력 약 23만 4천 명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질적으로는 이지스함, F-15 전투기, E767 공중조기경보기 등 최첨단 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첨단 군사력을 구비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로 평가된다.

우리의 여론은 안보분야에 있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장선에서 일본과는 경제협력보다 안보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가지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협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1990년 이후 일본의 상대적 쇠퇴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절대적 쇠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으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핵심은 중국의 부상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와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제 4 장 |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상관관계분석





## 제 4 장

###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 상관관계분석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세계질서의 변화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국가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중요한 전환을 경험하였다. 1948년 건국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냉전질서 아래 북한이라는 주적과 경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반공외교노선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노선은 노태우 정권 말까지 지속되었다.

한국 외교의 전환은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국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이 앞선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비전향 장기수, 리인모를 복송하는 등의 대북유화 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반공외교를 탈피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도는 김대중 정권에 와서 햇볕정책으로

구체화 되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자주를 전면에 표방하는 6·15선언으로 결실을 맺었다. 6·15선언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에 입각하여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추진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정권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직접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다.

노무현 정권시기에 시작된 ‘동북아 균형자론’이 발표된 이후 주변국은 물론 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동북아 균형자론의 핵심은 미국의 세계경영 전략에 따른 동북아 질서 재편 구상과 여기에 편승한 일본의 동북아 패권추구 전략, 이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구도라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생존 및 발전의 전략이다. 즉, 한국의 안보와 발전의 문제를 주변국가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한·미동맹의 복원을 표방하였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로 구체화된 한국 외교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나타난 한국외교의 질적 발전을 구체화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국력을 활용하여 외교정책의 질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한반도에 국한하여 외교관계를 구상하던 2000년 이전과 비교하여 외교 전략의 안목을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을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의 구체화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조되던 소프트 파워, 스마트 외교, 기여 외교,

녹색성장, 인간안보, 국력의 제고와 같은 개념을 외교정책에서 언급하는 상황이 바로 성장한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대한 자신감과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다.

한국의 대외적 위상은 지난 50년간 빠른 성장을 하였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후 13년 만인 2009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에 가입하였다. OECD 출범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번째 사례로, 한국의 달라진 국제사회 위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하게 돼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제정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와 국내정치에서 민주화의 진전은,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방향이 의미를 가지는 연구로 부상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여론의 주체인 대중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담당하는 구체적인 역할과 영향력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서구학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주의가 진전된 우리의 국가체제에서 외교정책 결정은 실질적으로 여론의 통제하에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연계되는 로즈나우의 '연계이론'이나 퍼트남(Putnam)의 'two-level game 이론'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여론과 대외정책결정의 상호관계를 일반화의 이론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이런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한국의 대중들이 외교정책에 대하여 가지는 선호를 '한국인의 평화관'으로 개념화하여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평화관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 I. 방법론 논의

본 장에서는 한국인들이 공유한 외교정책에 대한 가치관을 평화관으로 대치(代置)하여,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평화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인구통계변수인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출신지역, 직업군 그리고 이념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단순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인구통계와 평화관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상호관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본 연구는  $\chi^2$ (카이제곱값)분포와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기법을 활용하였다. 두 검증방법은 모두 2개 이상의 모집단의 표본평균을 동시에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두 집단의 표본평균의 유의성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므로  $\chi^2$ 분포의 검증은 그룹에 측정된 자료의 속성이 숫자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분류로 측정된 값을 가지는 변수에 활용된다.

분산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할 때 대립가설(hypothesis)은 모집단의 평균이 같지 않다고 설정하고, 이에 대한 귀무가설(null hypothesis)은 집단의 평균이 동일하다고 설정한다. 분산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의 논리는 동일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더라도 표본들의 평균값 사이에는 특정한 정향을 나타내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표본의 평균들 사이의 차이가 정상적인 표본추출과정에서의 변동량 보다 크면 이 차이는 유의하다고 간주되어 귀무가설이 부정되고 모집단의 평균들이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다른 통계적 가설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산분석기법도 표본은 동일한 분산값을 가진 정규적으로 분포된 모집단으로 추출된다는 전

제와 분산분석 절차는 독립적인 표본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분산분석기법의 절차는 대상분포가 정규분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도 큰 영향이 없으며 표본의 크기가 비슷하면 분산값이 같아야 한다는 가정도 중요하지 않으므로 분산분석기법이 설문을 통한 통계자료의 분석에 널리 사용된다.

분산분석은 귀무가설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두 개의 추정치를 각 그룹의 표본을 이용하여 계산한 다음 이 분산값과 기준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한다.

$$\text{그룹 간 분산} = \frac{\sum (\bar{X} - \bar{\bar{X}})^2}{k-1} \cdot n$$

여기서  $k$ 는 그룹의 수를 나타내고  $n$ 은 표본의 수를 나타낸다. 그룹 평균들의 평균( $\bar{X}$ )과 각 그룹들의 평균( $\bar{\bar{X}}$ )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산을 구한다.

$$\text{그룹 내 분산} = \frac{\sum \sum (X - \bar{X})^2}{k(n-1)}$$

귀무가설이 사실인 경우에는 분산이 같고, 평균이 서로 같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면 그룹 간 분산과 그룹 내 분산의 추정치가 비슷하여 두 분산의 비율은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반면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두 분산값의 비율이 1과 멀어질 것이다. ANOVA 기법에서 사용되는 검증통계량은  $F$ -분포를 사용한다.  $F$ -분포는 두 개의 분산을 비교하는 데 적절하고, ANOVA에서는 그룹 간 분산을 그룹 내 분산으로 나누어서 비교하기 때문이다.

ANOVA 기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룹 간의 평균값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립가설은 그룹마다 평균값이 다르다는 가설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도 수준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Type I 또는 Type II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alpha=0.05$  수준으로 결정한다. 이를 통해 계산된  $F$ 값을 기준  $F$ 값과 비교하여 계산된  $F$ 값이 기준  $F$ 값보다 크면 100번 중에 5번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귀무가설을 부정하고 대립가설을 수용하여 그룹별 차이가 의미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검증기법들과 마찬가지로 분산기법의 경우도 증거가 매우 뚜렷하지 않는 한 귀무가설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집단 간의 차이는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무가설을 반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 II. 이념적 성향과 평화관의 상관관계

한국사회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선호를 질문하는 경우 응답자의 정상적인 대답을 얻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선 한국의 정당은 선거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정당과 일체화하여 대답하는 경향이 현실적으로 적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선호를 설문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다른 장애요인은 설문조사가 시행된 시점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시기상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반감을 불러와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

선호도 대신 이념적 성향만을 포함하였다.

응답자 스스로 대답한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외교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차분석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다음의 <표 2>에 나타난 10가지 정책분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이념적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독도문제, 동북공정,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시민권 부여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념적

<표 2> 이념적 성향과 외교정책 선호도

의제		진보	중도	보수
국방비 증액	찬성	135 (15,5)	199 (22,19)	203 (22,63)
	보통	69 (7,69)	113 (12,60)	58 (6,47)
	반대	50 (5,57)	42 (4,68)	28 (3,12)
전시작전권 전환	찬성	141 (16,30)	163 (18,84)	108 (12,49)
	보통	49 (5,66)	87 (10,06)	49 (5,66)
	반대	54 (6,24)	97 (11,21)	117 (13,53)
북핵개발에 대응한 남한의 핵개발	찬성	124 (14,04)	189 (21,40)	175 (19,82)
	보통	34 (3,85)	62 (7,02)	37 (4,19)
	반대	91 (10,31)	99 (11,21)	72 (8,15)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장벽 설치	찬성	133 (16,04)	161 (19,42)	135 (16,28)
	보통	65 (7,84)	124 (14,96)	77 (9,29)
	반대	49 (5,91)	43 (5,19)	42 (5,07)
자원확보를 위한 독재정부와 협력	찬성	136 (15,65)	196 (22,55)	180 (20,71)
	보통	53 (6,10)	98 (11,28)	50 (5,75)
	반대	58 (6,67)	51 (5,87)	47 (5,41)
개도국 원조 확대	찬성	196 (21,63)	243 (26,82)	221 (24,39)
	보통	41 (4,53)	93 (10,26)	50 (5,52)
	반대	17 (1,88)	26 (2,87)	19 (2,10)
국제기구 지원 확대	찬성	179 (20,16)	209 (23,54)	210 (23,65)
	보통	56 (6,31)	113 (12,73)	63 (7,09)
	반대	17 (1,91)	25 (2,82)	16 (1,80)
대북 경제지원 확대	찬성	113 (12,35)	109 (11,91)	59 (6,45)
	보통	50 (5,46)	91 (9,95)	51 (5,57)
	반대	93 (10,16)	165 (18,03)	184 (20,11)
평화유지군 파견	찬성	164 (18,20)	228 (25,31)	219 (24,31)
	보통	66 (7,33)	93 (10,32)	50 (5,55)
	반대	26 (2,89)	38 (4,22)	17 (1,89)
기후변화 적극대응	찬성	237 (26,22)	291 (32,19)	251 (27,77)
	보통	17 (1,88)	63 (6,97)	32 (3,54)
	반대	1 (0,11)	5 (0,55)	7 (0,77)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선호에 따른 응답의 차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나, 중국이 동북지역이라 부르는 만주점 경지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진보, 중도, 보수와 무관하게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하는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념과 외교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chi2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논의에서 상술할 것이다.

## 1. 주변국과의 민족문제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독도 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중에서 특히 독도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면 진보,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유효 응답자 중에서 852명, 약 93%가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독도문제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유효 응답자 중에서 782명, 약 87%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토 및 역사 문제와 같이 국민의 정체성 또는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응답에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양자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의 민족이 국가를 형성할 때 민족국가라고 부른다. 민족은 그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문화적인 성격이 강한데 비해 국가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정부를 가지는 법적 실체로

서 일정 영토 안에서 합법적으로 주권을 독점한다. 한국의 경우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문화적 공동체가 법적 실체인 국가를 공유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들의 평화관에는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으로 공유된 가치관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투영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 민족국가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에 있어서도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경우, 구한말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에 한국민이 경험한 역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형성해왔는데, 이 중에서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를 염두에 둔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서는 반감을 넘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관계에서 일본의 망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일반적인 국제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과민한 수준의 반응을 보여 왔다. 일본은 199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전체 분석기간이 된 180개월의 기간 중에 약 50개월에 걸쳐 56회의 망언을 한국에 제기했고, 이때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일본의 행위에 비해 강력한 대응으로 나타났다(이성우 2006).

일본의 망언은 지속적으로 독도문제, 식민지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일본에서 제시하는 망언의 특성상 일본 정계의 유력 인사가 한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회적인 발언을 행하는 것은 언어표현에 그치는 경우이므로 분쟁의 수준으로 볼 때,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행하는 망언은 일회성이며, 분쟁의 수준도 낮은 '비난' 정도에 그치게 된다. 이에 반해서 일본 정계의 유력 인사의 망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빈도와 강도 면에서 훨씬 강하다.

〈표 3〉 영토분쟁 문제와 관련한 반응의 상호관계

		동북공정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강력대응		
		찬성	보통	반대
독도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 강력대응	찬성	790 (81.78)	82 (8.49)	22 (2.28)
	보통	35 (3.62)	17 (1.76)	6 (0.62)
	반대	6 (0.62)	5 (0.52)	3 (0.31)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망언을 하게 되면, 정부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외교부와 주일대사의 유감표명, 국회의원들의 성명 또는 항의 방문, 지방자치 단체 간 교류의 일방적 취소,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일 시위 등의 다양한 사건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반응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망언에 비해서 지속적인 비판과 비난을 동반하는 반응을 제기한다.

역사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과거의 잔혹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무리한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망언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망언과 관련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행위를 많이 반복하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분쟁은 누적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일본만큼 심각한 수준의 분쟁의 대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주변국으로서 역사적으로 갈등은 있었지만, 일본과 같이 근대사에서 직접적인 가해와 피해의 역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갈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토와 역사문제에 대한 갈등에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앞의 <표 3>이 보여 주듯이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한 반응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81%의 응답자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찬성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들이 공유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적 경험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영토와 역사가 관련된 문제는 정책문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는 관련성이 없이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에는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영향을 미치는 여지가 적다.

## 2. 안보문제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념적 성향이 정책의 선호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와 보통이라는 항목이 포함됨으로써 다수의 응답자들이 특정한 정책적 입장을 취한다기보다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제한된 상황 아래서 본 분석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진보여론의 반대 응답은 5.57%로 보수여론의 반대 약 3.12%보다 약 두 배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보수여론의 22.63%에 달하는 찬성이 진보여론의 찬성 15.5%보다 유의도가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중도여론의 찬성이 22.19%에 달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

한 반응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라 생각된다. 우리의 대응 핵개발에 대하여는 보수여론의 19.8%가 찬성하는 반면 진보여론의 1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중도여론의 찬성이 21.4%에 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대응 핵개발에 대하여 보수여론의 반대는 8.15%임에 반해 진보여론의 반대는 10.3%를 그리고 중도여론의 반대는 11.21%이다.

국방비 증액과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 핵개발에 대해서는 중도여론의 찬성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중도여론이 보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념적으로 중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개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7%에 머물러 있다. 이 결과는 우리의 여론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이념적 선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에 유리한 상황으로 연결된다는 이해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흥미로운 논의는 북한에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진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진보여론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보다 많은 찬성이 나타나고, 보수여론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보다 많은 반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인 추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 반대여론 48.3%가 찬성여론 30.86%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여론의 비율이 20.98%로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여론조사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여론의 전반적인 정서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보수여론의 반대 13.53%는 진보진영의 반대 6.24%와 비교해 볼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 진보여론의 찬성은 16.3%, 보수 여론의 찬성은 12.5%인데 반해서 중도여론의 찬성이 18.84%에 달한다. 안보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이 관련된 전시작전권의 전환, 북한 핵에 대응한 우리의 핵개발, 북한에의 경제지원에 대한 여론의 응답에는 이념적 선호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반면, 중국과 일본과 관련된 안보 문제에는 이념적 선호가 반영되지 않고 민족적 정체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학계에서 진행된 논의를 보면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이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김유남 1999, 24-26)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군사정권, 민주주의의 수용 등을 경험하면서 세대별 그리고 계층별로 북한에 대한 이념적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념적 선호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이념적 성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한반도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을 말해준다.

중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련하여 안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동북지역에 대한 역사와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근대사에 대한 일본의 망언 등에 의해 직접 대한민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중국과 일본은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념적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한다.

### 3. 국적문제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

국적에 대한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되는데 국적문제와 이념의 상호 관련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적문제가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와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탈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 없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반면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념적 성향과 관련 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 유효 응답자 중에서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약 60%가 이중국적의 부여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중국적을 이용하려는 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

〈표 4〉 국적부여 문제와 관련한 반응의 상호관계

		외국인 배우자에게 즉시 국적 부여		
		찬성	보통	반대
국방의무 이행과 관계없이 이중국적 부여	찬성	162 (18.8)	32 (3.59)	32 (2.92)
	보통	80 (8.98)	45 (5.05)	19 (2.13)
	반대	287 (32.21)	116 (13.02)	124 (13.92)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한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 즉시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전체 유효 응답자 중에서 553명 약 61%가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인으로 법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류보편주의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표 3〉의 영토 및 역사문제에 대한 반응에 적용한 논리를 국적부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인 2세가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문제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경우 서로 다른 문제에 관련한 반영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성향이 일관된 정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적부여 문제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나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는 관련성이 없는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중국적이 될 것이고, 국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중국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즉시 부여하는 문제에 찬성하면서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32.21%

로 가장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적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대한 반면, 국적을 이탈하여 국민으로서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국적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국제경제 문제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정책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상당부분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chi2 분석결과는 Pearson  $\chi^2(4)=10.89$ , Probability=0.028 이라는 점에서 이념이 관세장벽의 설치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응답자의 51.75%가 관세부과 등을 통해 자유무역을 제한을 가하는 것에 찬성하고, 16.16%만이 자유무역의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32%의 응답자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념과 보호무역주의는 정상분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중도에 있는 사람이 보호무역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여주고, 보수나 진보와 같이 이념적 선호가 분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 결과는 경제적인 문제는 이념적 선호와 차별

되는 이해득실의 실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선호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중도에 다수의 지지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에 필수요소인 자원의 확보와 관련한 “부족한 자원 확보를 위해 외국의 비민주적 정부와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문에서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 유효응답자의 58.92%가 비민주적 정부와 협력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반대의견은 17.95%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항목에서  $\chi^2$  분석결과가 Pearson  $\chi^2(4) = 16.4399$ , Probability = 0.002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념적 성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여론은 외국의 독재정권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지와 낮은 수준의 반대를 보이는 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여론은 외국의 독재정권과의 협력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지지와 높은 수준의 반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의 확보를 위한 독재정부와의 협력에도 앞의 보호무역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념과 독재정부에 대한 협력의 선호도 정상분포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념적으로 중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민주적 정부와의 협력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실리의 추구는 이념적으로 보수나 진보의 선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특별한 선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경제 문제로 분류된 보호무역 정책의 실행과 자원 확보를 위한 비민주적 정부와의 협력은 이념적으로는 규정짓기 어려운 문제이나 일반적으로 보수적 선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소비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정책의 시행

은 저소득 계층보다는 기업가들에게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사용된다. 산업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도 저소득층인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이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호무역에 대한 지지에서는 이념적으로 보수층이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경향을 찾기 어렵다. 이와 달리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국의 비민주적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지지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20.7%임에 반해 진보적인 사람은 15.65%라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 때문에 보호무역에 대한 반응에서 보다 자원 확보를 위한 비민주적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반응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더 높은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 5. 국제사회의 기여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지지활동과 관련한 우리 여론의 반응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 부상한 한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일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경제·외교·군사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변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김치욱 2009; 김준석 2010; 박윤주 2010).

국제사회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을 활성화하고, 국가들 사이의 상호교류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도적 국제주의의 태도가 한국의 여론에도

확대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견국가의 역할과 인도주의적 국제주의 가치의 확산은 공적개발원조(ODA)의 변화에도 나타난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전체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GNI의 0.22%,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0.92%를 공적개발원조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세계 13위의 경제규모의 한국의 개발원조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1991년 1.1억 달러에서 2008년 8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원조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이념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chi2 분석결과 Pearson chi2(4) = 11,5086, Probability = 0.021로 이념이 개발도상국에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유효응답자의 72.85%가 개발도상국의 질병과 기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개도국에 대한 대외원조의 제공에 반대하는 여론은 유효응답자의 6.84%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보통이라는 반응을 부정적으로 간주해도 대한민국이 개도국에 공적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결과는 우리국민의 여론이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응분의 기여를 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념적 성향이 여론의 방향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는 경우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력하게 분출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저하게 여론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설문을 실시한 의도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동족, 통일의 대상, 적대세력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원으로 간주하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본 설문 결과 우리의 여론은 개도국에의 공적개발원조지원과 국제기구에의 지원은 인도적 국제주의 또는 보편주의적 가치의 실천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제기구에의 분담금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이념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chi^2$  분석결과 Pearson  $\chi^2(4) = 14.0748$ , Probability = 0.007 로 나타나서 이념적 성향이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제공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 유효응답자의 67.34%가 국제기구에 지원을 찬성하고 6.53%만이 국제기구의 지원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는 집단 중에서 이념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보다 많고 반대하는 집단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가설립 과정에 있어 남한사회 내부에서의 좌우

이념대립은 심각했다. 이념 갈등 속에서 1948년 2월 유엔 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의 수립을 가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5월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의 수립이 선포되고 12월에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표되었다.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유엔회원국 16개국으로 구성된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였다는 이해가 국민전반에 공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UN을 위주로 이해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평화유지군의 파병에 대한 여론의 반응과 이념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chi^2$  분석결과 Pearson  $\chi^2(4) = 15.0012$ , Probability = 0.005 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념적 성향이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전체 유효응답자의 67.81%가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찬성하고 8.99%만이 평화유지군 파병에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화유지군의 파병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여론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여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여론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는 여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론의 이념적 성향이 평화유지군 파병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보수적인 여론이 해외 파병에 보다 우호적이며 진보적인 여론은 해외 파병에 반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4년 참여정부 시기에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하여

전국 주요대학으로 구성된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주도로 파병철폐와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었다는 점과 2009년 7월 국군의 레바논 파병 연장동의안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안의 국회상정에 대하여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라크 추가파병을 논의하던 시점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추가파병 문제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특수성과 한·미 동맹관계, 그리고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등 국익을 고려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인공기 소각 등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온 민주참여네띠즌연대는 “파병은 국익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라크 파병을 적극 지지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에 대하여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이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파병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해외 파병에 대하여 나타났던 그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진보적 시민단체는 파병에 반대하고, 보수적 시민단체는 파병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앞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는 설득력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형적으로 국제사회의 공공재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앞에서 논의한 중견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방면에서 가능하다. 이념적 성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대응 사이의 상관관계의  $\chi^2$  분석결과 Pearson  $\chi^2(4) = 21.1984$ , Probability = 0.000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유효응답자의 86.17%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보적 태도를 포함해서 반대 입장은 14%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경우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반대하는 경우가 찬성하는 경우에 비해서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보통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경우가 진보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많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보수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후변화의 적극적 대응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고 진보적 성향이 강할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여론은 기후변화의 적극적 대응에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진행된 이후에 나타난 생명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1970년대와 80년의 기간에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경제발전이 최고의 관심사였다. 1990년대에 일정 수준의 경제발전을 달성한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적으로 최고의 관심사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거치고 경제적 수준이 안정기에 돌입하자 환경과 생명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여 국제정치에서 환경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은 한국사회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지성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평화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처한 현실문제에 있어서 현실성이 가능성을 제약

하는 경우를 폭력이라고 한다. 19세기에 폐렴에 걸린 환자가 사망하는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력이 아니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폐렴에 걸린 환자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제약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현실성이 가능성을 제약한 것으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Galtung 1969).

2003년 필리핀 이주 노동자 로드리고 씨는 결핵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생긴 합병증과 급성 폐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으로 목숨을 잃은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건강의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치료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평화연구의 관점이 아니라 해도 한국사회에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류 보편적 가치의 적용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료보험의 제공을 지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의 지지와 이념적 성향은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에 대한 Chi2 검사와 Pearson chi2(4) = 2.7208, Probability = 0.606 은 통계적 유의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유효응답자의 83.59%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을 지지하고 중도를 포함해서 16.5%만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반대의견은 5.73%로 나타났다.

## 6. 국가별 중요도와 이념성향의 상관관계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여론의 인식은 대외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인식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상호협력,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 의한 동아시아 주변정세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외교정책 분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와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에 대한 여론의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통계분석의 결과부터 논의하면 경제발전에 중요한 협력파트너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성향에 대한 분석은  $Pearson\ chi^2(6) = 9.8585$ ,  $Probability = 0.131$  으로 실질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안보문제에 대한 중요 협력파트너에 대한 인식과 이념적 성향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은  $Pearson\ chi^2(6) = 11.9822$ ,  $Probability = 0.062$  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경계선상에 있다. 안보문제

(표 5) 국가별 중요도와 이념성향의 상호관계

		이념적 성향		
		진보	중도	보수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미국	221 (24.42)	302 (33.37)	267 (29.5)
	중국	26 (2.87)	42 (4.64)	14 (1.55)
	일본	5 (0.55)	12 (1.33)	8 (0.88)
	러시아	1 (0.11)	4 (0.44)	3 (0.33)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미국	71 (8.13)	88 (10.08)	61 (6.99)
	중국	107 (12.26)	137 (15.69)	132 (15.21)
	일본	50 (5.73)	90 (10.31)	70 (8.02)
	러시아	20 (2.29)	32 (3.67)	15 (1.72)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에 대한 국가별 선호는 이념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별 선호는 이념적 영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보문제에 있어서 이념적 선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이다. 이념적으로 중도와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 미국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진보적 성향의 여론은 보수적 성향에 비해서 중국에 보다 많은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해서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중요도는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일본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여론은 3%, 러시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여론은 1%로 실질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에 대한 파트너의 중요성과 이념적 선호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에 대한 유효응답자의 43.16%가 중국을 선택한 반면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보다 낮은 25.2%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24.06%가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높은 중요도는 21세기의 국제관계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된 중국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

한·중수교 이후 급증하는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하여 중국은 새로운 투자와 수출의 대상국으로 인식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시각이 나타나면서 중국을 한국경제발전의 경쟁자 또는 걸림돌로 인식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한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기회이자 위협요소라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가지는 이중성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취한 대중정

책의 특성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관여(engagement)와 위협대비(hedging)의 이중전략을 사용해 왔고, 일본도 경제와 안보문제를 분리하여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적용해 왔다. 현대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국력의 군사적 국력으로의 전환가능성(fungibility)은 지난 세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인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의 영향으로 군사적으로 대비가 덜 되어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전된 경제력을 기초로 단시일 내에 군사적 측면의 국력을 세계수준으로 보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군사적 강대국을 지향해 온 중국의 경우 경제적 부상은 경제적 위협으로만 그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대응전략이 큰 틀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파트너라는 점을 의미한다.

### III. 인구통계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정치학 분야에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질문의 대상이 되는 요인은 세대, 성별, 교육수준, 출신 또는 거주지역으로 대별되는 인구통계변수이다. 인구통계는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선거의 결과, 특정한 정책의 선호 등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 의원이나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왔다. 사회문제에 있어서 노년세대가 청년세대보다 보수적이라는 주장이나, 대외정책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외교정책에서 더 평화적이라는 주장이 인구통계의 정책적 선호에 대한 영향분석에 사용되어 왔다.

## 1. 세대별 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한국인의 평화관에서 세대에 따른 차별성은 단순히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이라는 생물학적 연령의 변화에 따른 안정의 추구와 보수화 경향과 변혁의 추구와 진보적 경향의 역동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10년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의 해소와 그 원인을 논의할 때에도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는 것처럼 대외정책과 관련한 평화관에서도 세대별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동시대를 살아왔던 특정 연령집단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은 세대와 평화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흥미롭고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그 기억을 가진 세대는 현재 60대 후반이거나 70대 이상의 노년층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사회내부의 이념대결, 남북한 군사대결, 그리고 미국과 서방국가를 위주로 하는 편향적 대외관계와 같은 전쟁의 후유증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1950년대 후반에 출생한 세대는 현재 60대를 구성한다. 이들 세대와 50대 후반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세대로서 물질적 부의 축적에 대한 의지, 성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성취동기와 같

은 가치를 강조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의 혜택을 보고 자란 현재의 40대는 물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같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세대이다. 그리고 지금의 30대는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보았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적 성장이 초래한 고용문제, 주택문제, 결혼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로 나뉘어진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세대는 10년을 단위로 상당히 다른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차이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인의 평화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연령은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문제와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대응,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제공의 4가지 정책영역에서 세대간 차이가 가지는 효과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안보문제, 경제문제, 그리고 사회정책과 관련한 총 11개의 대외정책에 걸쳐 연령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6>에 표시된 평화관은 chi2 검사에서 probability < 0.05 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안보문제에 대한 평화관과 세대변수의 상호관계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는 찬성의 의견이 반대와 무차별의 의견에 비해서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반대는 20대와 30대에 많이 나타나는 반면, 국방비의 증액에 대한 찬성은 40대 이후의 세대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의 지출확대에 대한 의견과 세대(연령)의 경우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방비의 증액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국방비 증액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

〈표 6〉 세대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이슈	반응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국방비 증액	찬성	87 (9.02)	101 (10.47)	126 (13.06)	106 (10.98)	163 (16.89)
	보통	62 (6.42)	59 (6.11)	61 (6.32)	30 (3.11)	45 (4.66)
	반대	27 (2.8)	35 (3.63)	35 (3.63)	13 (1.35)	15 (1.55)
전시작전권 전환	찬성	72 (7.96)	93 (10.29)	101 (11.17)	61 (6.75)	100 (11.06)
	보통	63 (6.97)	42 (4.65)	41 (4.54)	21 (2.32)	29 (3.21)
	반대	34 (3.76)	49 (5.42)	69 (7.63)	56 (6.19)	73 (8.08)
북한 핵개발에 대응 핵개발	찬성	49 (5.31)	82 (8.88)	126 (13.65)	94 (10.18)	164 (17.77)
	보통	36 (3.90)	43 (4.66)	38 (4.12)	10 (1.08)	10 (1.08)
	반대	90 (9.75)	61 (6.61)	49 (5.31)	37 (4.01)	34 (3.68)
관세부과 등 자유무역 제한	찬성	65 (7.61)	87 (10.19)	111 (13.0)	76 (8.09)	106 (12.41)
	보통	70 (8.2)	64 (7.49)	52 (6.09)	38 (4.45)	48 (5.62)
	반대	35 (3.1)	28 (3.28)	35 (4.1)	16 (1.87)	23 (2.69)
자원확보를 위한 독재정부와 협력	찬성	58 (6.44)	94 (10.44)	135 (15.00)	91 (10.11)	148 (16.44)
	보통	67 (7.44)	56 (6.22)	33 (3.67)	22 (2.44)	31 (3.44)
	반대	49 (5.44)	38 (4.22)	38 (4.22)	24 (2.67)	16 (1.7)
개도국에 대한 원조확대	찬성	116 (12.29)	126 (13.35)	176 (18.64)	108 (11.44)	162 (17.16)
	보통	45 (4.77)	53 (5.61)	34 (3.60)	24 (2.54)	34 (3.6)
	반대	14 (1.48)	11 (1.17)	11 (1.17)	11 (1.17)	19 (2.01)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 확대	찬성	99 (10.78)	119 (12.96)	149 (16.23)	101 (11.0)	147 (16.01)
	보통	59 (6.43)	60 (6.54)	52 (5.66)	32 (3.49)	35 (3.81)
	반대	17 (1.85)	10 (1.09)	13 (1.42)	7 (0.76)	18 (1.96)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	찬성	54 (5.68)	70 (7.37)	72 (7.58)	34 (3.58)	51 (5.37)
	보통	45 (4.74)	45 (4.74)	52 (5.47)	29 (3.05)	27 (2.84)
	반대	76 (8.0)	77 (8.11)	95 (10.0)	85 (8.95)	138 (14.53)
평화유지군 파견	찬성	92 (9.82)	120 (12.81)	143 (15.26)	114 (12.17)	164 (17.5)
	보통	64 (6.83)	56 (5.98)	49 (5.23)	20 (2.13)	30 (3.2)
	반대	20 (2.13)	16 (1.71)	24 (2.56)	11 (1.17)	14 (1.49)
국방의무이행과 관계 없이 이중국적 인정	찬성	41 (4.69)	54 (6.18)	44 (5.03)	23 (2.63)	53 (6.06)
	보통	44 (5.03)	32 (3.66)	31 (3.55)	17 (1.95)	19 (2.17)
	반대	89 (10.18)	100 (11.44)	124 (14.19)	98 (11.21)	105 (12.21)
우리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부여	찬성	86 (9.15)	99 (10.53)	131 (13.94)	98 (10.43)	157 (16.7)
	보통	52 (5.53)	57 (6.06)	46 (4.89)	21 (2.23)	19 (2.02)
	반대	38 (4.04)	34 (3.62)	38 (4.04)	30 (3.19)	34 (3.62)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일반적인 양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30대와 40

대가 높은 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는 50~60대의 노년층에 높게 나타나고, 20~30대에 낮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한국전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과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적 교육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의 맞대응으로 핵개발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맞대응에 40, 50, 60대로 갈수록 찬성이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30대의 청년층은 찬성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대의견의 경우는 이와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30대의 청년은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년층에는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핵무기와 관련해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서 모험주의적인 경향을 가진다고 해석하기보다는 한국전쟁의 직간접적 경험을 공유한 세대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경제적 실패로 인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군사적 세력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통한 비대칭균형을 추구하는 한편, 남한에 대한 협상용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여론의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에 응답자들은 한국의 대응 핵개발에 동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전환,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핵개발의 3가지 영역에서 세대별 변수가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세부과 등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조치에 연령대별 반응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리해서 고려하면, 30대와 40대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 찬성의견의 경우 40대에서 13% 그리고 30대에서 10.19%의 높은 찬성비율과 동시에, 반대의견의 경우 40대에서 4.1% 그리고 30대에서 3.28%로 가장 높은 두 연령집단의 일관된 의견표명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이슈 특히 대외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식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농업과 목축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은 자유무역에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선별적인 경향이 있으나 대체로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으로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의 연령대는 경제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세대이므로 찬성이든 반대든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확보를 위하여 독재정부와 협력에 대한 반응에서도 연령은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독재정부와의 협력을 6.44%만 지지하는 반면, 3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10.44%에서 16.44%로 점진적으로 지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10.11%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대의견의 경우에도 찬성의견과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대에서 5.4%로 반대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의견은 4.2%에서 2.6%로 그리고 1.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외국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협력이라는 실리보다는 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판단의 문제에서 연령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보수적인 경향, 즉 독재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지지는 증가하고 반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확대에 대한 연령대별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원조의 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12.2%가 지지하는 반면 50대의 11.4%를 제외하면 3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13.3%에서 17.1%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확대를 반대하는 경우에 20대가 1.4%로 미세한 수준이지만 조금 높게 나타났고 그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1.1% 그리고 60대에서 예외적으로 2.1%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공여하는 국가로 전환된 사례라는 수식어가 있다. 실제로 한국은 1953년부터 1960년까지 경제개발 이전 시기에는 전후 국민의 생활이 파탄상황에서 무상원조가 주를 이루었고 1961년부터 1980년까지는 유상원조를 받아 수출주도형 산업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이재우 2006, 8-11).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외원조를 공여하는 문제에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 초기에 해외로부터의 유무상 원조나 차관 등 선진국의 지원을 통해 생존에 대한 지원은 물론 경제적 부흥을 주도한 경험을 50대와 60대의 노년층에 많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확대에 관한 여론의 반응도 개도국의 원조확대에 대한 반응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20대의 경우 10.7%만이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지원을 찬성하는 반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30대 12.9%, 40대 16.2%, 50대 11%, 그리고 60대의 경우 16%로 지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찬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대의 경우 1.85%로 반대가 높은 편이

며 30대에서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의 경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60대의 경우는 반대의견이 1.9%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경우 50대 그리고 반대의 경우 60대가 보여준 경향으로부터 미세한 이탈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대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이 경제개발 초기에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확대에 대한 여론에 연령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찬성여론은 40대 7.58% 그리고 30대 7.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 3.5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20대의 5.6% 그리고 60대의 5.3%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반대여론의 경우는 60대가 14.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40대가 10%, 50대 8.9%, 30대 8.1%, 20대 8%로 나타났는데, 40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반대 비율을 제외하면 찬성여론과 논리적으로 일관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30대와 40대의 경우 과거 80년대 후반 민주화를 주도한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일정한 연령집단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정치를 설명하는데 세대문제를 언급할 때 많이 언급된 386세대는 당시 30대이며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60년대 출생자들로 1980년대 신군부 독재치하에서 민주화 투쟁의 대학시절을 보낸 사람이다. 이들이 국내정치의 민주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기사항이던 북한을 전면에서 다루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30대 후반 또는 40대는 북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립노선보다는 유연한 포용노선을 정책적으로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들 386세대의 일부는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여 북한의 정권보다는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통에 주목하여 북한정권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선호하는 정치세력도 배출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40대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반대가 10%로 60대의 14.5%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반대의 비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치를 설명할 때, 세대를 물질주의(materialism)세대와 물질주의 이후(post materialism) 세대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Granato et al. 1996) 한국의 정치에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민주화 이전과 이후 세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서 물질적 빈곤을 경험했던 물질주의 세대는 경제적 가치와 성취동기 등을 강조하는 반면 그들의 자녀세대인 물질주의 이후 세대는 경제적 가치와 성취동기보다는 민주주의나 인본주의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는 성향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성향의 차이가 정치적 결정에도 반영되었다. 한국사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주도한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구분할 수 있고,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경험을 공유한 세대의 특정한 정향은 국내정책뿐 아니라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시대적 경험과 이념적 성향의 차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햇볕정책에 대한 선호와 강경대응의 선호로 구분되는 좌우 이념의 경향으로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 것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세대간의 경험의 차이가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 투영되었던 방식과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평화유지군의 파병에 대한 지지는 세대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지지여론의 경우 20대의 경우 찬성이 9.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60대 17.5%, 40대 15.2%의 순서

로 나타났고, 30대는 12.8% 그리고 50대는 12.17%로 나타났다. 평화 유지군의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은 찬성여론과 논리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40대에서 반대여론이 가장 많은 2.56% 그리고 20대가 2.13%를 차지하고 50대가 1.17%로 반대여론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60대 1.49%, 30대 1.71%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단 찬성여론만을 본다면 군복무를 해야 할 20대가 파병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높고 찬성여론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50대의 경우는 이들 파병 당사자들의 부모세대라는 점에서 파병에 대한 지지 여론이 당사자인 20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났다. 파병의 당사자와 당사자의 부모 세대인 2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만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병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보수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2가지는 국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성인 남자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흥미롭다. 우선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이중국적 인정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40대가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를 60대 12.2%, 30대 11.4%, 50대 11.2%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병역의무의 당사자인 20대의 경우 반대여론이 1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찬성의 여론은 50대가 2.6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20대 4.7%로 나타났다. 찬성여론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30대 6.2%, 60대 6.0%, 그리고 40대 5.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에서 국방의 의무의 당사자인 20대와 그들의 부모세대인 50대가 보여준 일관된 지지와는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세

대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60대의 경우는 찬성과 반대에서 모두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강한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 국적을 당연 부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선호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부여에 대한 찬성여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로 16.7%가 지지하고, 3.6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세대가 자신의 자녀들이 맞이하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민으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기대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40대에서 13.94%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와 50대는 각각 10.5%와 10.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대는 9.15%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한국 국적의 부여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체적으로 3.19%에서 4.0%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50대의 반대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30대와 60대 모두 3.62% 그리고 20대와 40대가 4.04%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인 40대와 부모세대인 60대가 높은 지지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대별 변수가 한국인의 평화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대변수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20대는 상대적으로 정책에 대한 선호와 반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경제적으로 활동적인 30대와 40대가 활발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년층인 60대와 50대의 의견개진도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의견의 분포에 있어서 다수집단을 구성하는 등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연령집단은 40대와 60대라고 할 수 있다.

## 2. 성별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세계각국의 정치를 설명할 때, 가장 흥미로운 인구통계 변수의 하나가 성별 차이이다. 특히, 평화연구가 진행되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Broyles 1990) 대외정책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대외정책에 성별 차이가 가지는 의의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부여하는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북한 핵에 대응한 핵개발, 자원 확보를 위한 독재정권과의 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원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의 정책에 대한 여론의 대응은 성별변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평화관은 <표 7>에 표시되어 있고 이들은  $\chi^2$  검사에서 probability < 0.05 의 기준을 충족한다.

국가의 안보문제와 관련한 국방비의 증액부분에서 남성의 찬성 비율(32.5%)이 여성의 찬성비율(27.8%)보다 가시적으로 많은 점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이와 동시에 전시작전권의 전환에 있어서 찬성의견에는 남녀의 차이가 현격하지 않은 반면, 반대 의견의 경우 남성의 반대(20%)에 비해서 여성의 반대(13%)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도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

〈표 7〉 성별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이슈	반응	연령	
		남성	여성
국방비 증액	찬성	314 (32.54)	269 (27.88)
	보통	105 (10.88)	152 (15.77)
	반대	63 (6.53)	62 (6.42)
동북공정에 강력한 대응	찬성	396 (40.78)	437 (45.01)
	보통	65 (6.69)	42 (4.33)
	반대	20 (2.06)	11 (1.13)
전시작전권 전환	찬성	208 (22.49)	229 (24.76)
	보통	84 (9.08)	118 (12.76)
	반대	185 (20.00)	101 (12.91)
관세부과 등 자유무역 제한	찬성	226 (25.83)	228 (26.06)
	보통	121 (13.83)	160 (18.29)
	반대	95 (10.86)	45 (5.14)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 확대	찬성	347 (36.6)	288 (30.38)
	보통	101 (10.65)	145 (15.3)
	반대	32 (3.38)	35 (3.69)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	찬성	168 (17.06)	126 (12.79)
	보통	94 (9.54)	109 (11.07)
	반대	224 (22.74)	264 (26.8)
평화유지군 파견	찬성	370 (38.34)	281 (29.12)
	보통	89 (9.22)	137 (14.2)
	반대	26 (2.69)	62 (6.42)
국방의무이행과 관계없이 이중국적 인정	찬성	96 (10.65)	129 (14.32)
	보통	61 (6.77)	83 (9.21)
	반대	303 (33.63)	229 (25.42)
우리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부여	찬성	307 (31.58)	282 (29.01)
	보통	99 (10.19)	102 (10.49)
	반대	76 (7.82)	106 (10.91)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다. 이 두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설명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국방비 지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으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전력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전환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상반되는 정향성을 가지고 있다. 국방비 지출에 대

한 찬성의 비율이 낮으며, 이와 동시에 전시작전권의 전환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여성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여론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차이는 군대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군 경험의 유무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견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평화유지군의 파병과 국방의무이행과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의 결과이다. 국제적인 분쟁지역에 유엔군의 이름으로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에 대하여 남성은 38.3%가 찬성하는 반면 여성은 30.3%만 찬성하고, 한편 남성의 경우는 2.6%가 반대하는 반면 여성은 6.4%가 반대하고 있다. 국제적인 분쟁에 있어서 국군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찬성의견을 표출하는 쪽에는 남성이 많고,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쪽에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방의 의무 이행과 무관하게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지만, 그중에도 남성은 33.6%가 반대하는 반면, 여성은 25.4%만이 반대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찬성응답자의 경우는 여성이 14.3%가 찬성하는 반면, 남성은 이보다 훨씬 적은 10.6%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전환, 평화유지군 파병, 군복무와 관련한 이중국적 부여 여부는 군대와 결합된 점에서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보문제라는 점에서 논리적 연계를 찾기는 어려운 분리된 문제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의견차이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는 군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이들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양상을 보여준다. 여성은 군대의 역할 증대에 소극적인 반면 남성은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확대에 대해서 여론의 전체적인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관하여 남성의 17.0%가 찬성하는 반면, 여성은 12.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22.7%가 반대하는 반면, 여성은 26.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의 방향은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지원에서도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의 경우에는 현격한 차이가 없지만 남성은 36.6%가 찬성하는 반면, 여성은 3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이 국제적인 지지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유무역조치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서 찬성의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반해, 반대의견의 경우에는 남성의 10.8%가 반대하는 반면, 여성은 5.1%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반대의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다양한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 경제적 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판단된다. 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경제적 실익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세부과 등 자유무역에 대한 제한에 보다 많은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즉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해 남성의 경우 31.58%가 찬성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29.0%가 찬성하고 있다. 혼인에 따른 국적부여에 관하여 여성은 10.9%가 반대하는 반면, 남성은 7.82%가 반대하는 점에서 미세한 차이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대한

〈표 8〉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4,030	12,319(3.7)	7,304(2.2)	5,015(1.5)
2003	304,932	25,658(8.4)	19,214(6.3)	6,444(2.1)
2004	310,944	35,447(11.4)	25,594(8.2)	9,853(3.2)
2005	316,375	43,121(13.6)	31,180(9.9)	11,941(3.8)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 원본: 법제처 생활정보

민국 국민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배우자 비율을 보면,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외국인 남편의 비율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남성의 반대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있어 남녀의 대응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아주 대조적이다. 독도문제와 동북공정 문제가 모두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두 분야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 만주 접경지역에 관련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영토문제에 중국의 의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성의 45.0%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찬성한 반면, 남성의 경우 40.7%가 강력 대응에 찬성하고 있고, 반대 의견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격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독도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

본의 망언은 주권의 직접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국민전체가 확고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중국의 만주와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조금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많은 과제를 남긴다.

위의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인의 평화관에 있어서 남녀의 성별 차이는 상당한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 차이가 한국인의 평화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청장년기에 경험하는 군대 복무 경험, 혼인에 있어 배우자 선택, 경제활동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외정책에 있어서 다른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3. 출신지역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출신지역은 전통적으로 정치분야에서 다양한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정지역은 자연지리적 및 인문지리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지역이 대외정책의 선호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중서부 지역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반면,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은 협력적 국제주의의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유형화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이갑윤 1998; 조기숙 2000; 문우진 2009, 108).

한국정치에서는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고질적 병폐로 지역주의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선택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정도는 낮지만, 일반 여론의 대외 정책에 관한 선호에 출신지역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선거와 관련한 투표행태 연구에서 거주지, 나이, 성별, 거주지 규모로 대별되는 경제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은 투표에서 유권자의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남은 보수적 정치성향을 지지하고, 호남은 진보적 정치성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명제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남에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가 없다거나 호남에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유권자가 없다는 극단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 성향은 유권자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재사회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의 배경은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뚜렷한 지역적 성향에 대한 일반화가 영남과 호남의 대비구도로 나타난다. 지역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평화관은 다음의 <표 9>에 표시되어 있고 이들은  $\chi^2$  검사에서 probability < 0.05의 기준을 충족한다.

출신지역과 평화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비 증액을 포함하여 6개 정책분야에서 출신지역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독도 영유권문제와 동북공정과 같은 영토주권의 문제,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표 9〉 성별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 이슈	반응	출신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이북· 기타
국방비 증액	찬성	74 (53.62)	90 (59.60)	31 (75.61)	118 (72.84)	78 (50.65)	91 (65.94)	90 (58.82)	3 (23.08)	4 (57.14)
	보통	38 (27.54)	42 (27.81)	6 (14.63)	24 (20.99)	50 (32.47)	31 (22.46)	46 (30.07)	4 (30.77)	2 (28.57)
	반대	26 (18.84)	19 (12.58)	4 (9.76)	10 (6.17)	26 (16.88)	16 (11.59)	17 (11.11)	6 (46.15)	1 (14.29)
북한 핵 개발에 대응 핵 개발	찬성	55 (40.15)	76 (51.70)	22 (57.89)	113 (72.44)	99 (62.66)	78 (56.12)	79 (52.67)	5 (38.46)	3 (60.00)
	보통	29 (21.17)	25 (17.01)	6 (15.79)	11 (7.05)	22 (13.92)	22 (15.83)	23 (15.33)	2 (15.38)	0 (0.00)
	반대	53 (38.69)	46 (31.29)	10 (26.32)	32 (20.51)	37 (23.42)	39 (28.06)	48 (32.00)	6 (46.15)	2 (40.00)
북한에 대한 경 제지원 확대	찬성	41 (29.29)	36 (24.00)	10 (24.39)	47 (28.31)	83 (51.23)	33 (22.45)	34 (22.08)	7 (54.85)	1 (25.00)
	보통	27 (19.29)	38 (25.33)	8 (19.51)	27 (16.27)	34 (20.99)	36 (24.49)	30 (19.48)	2 (15.38)	0 (0.0)
	반대	72 (51.43)	76 (50.67)	23 (56.10)	92 (55.42)	45 (27.78)	78 (53.06)	90 (58.44)	4 (30.77)	3 (75.00)
평화유지 군 파견	찬성	89 (63.57)	104 (70.75)	30 (73.17)	112 (70.44)	95 (60.13)	96 (68.57)	108 (70.59)	6 (50.00)	5 (71.43)
	보통	34 (24.29)	38 (25.85)	10 (24.39)	35 (22.01)	41 (25.95)	35 (25.00)	30 (19.61)	1 (8.33)	1 (14.29)
	반대	17 (12.14)	5 (3.40)	1 (2.44)	12 (7.55)	22 (13.92)	9 (6.43)	15 (9.80)	5 (41.67)	1 (14.29)
우리국민 과 결혼 한 외국 인 배우 자에게 자에게 국적부여	찬성	66 (46.81)	90 (61.22)	28 (68.29)	106 (64.63)	93 (58.86)	91 (63.64)	99 (64.71)	8 (66.67)	3 (50.00)
	보통	47 (33.33)	35 (26.81)	9 (21.95)	20 (12.20)	31 (19.62)	25 (17.48)	30 (19.61)	3 (25.00)	0 (0.0)
	반대	28 (19.86)	22 (14.97)	4 (9.76)	38 (23.17)	34 (21.52)	27 (18.88)	24 (15.69)	1 (8.33)	3 (50.00)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칼럼의 비율을 각각 나타냄

나타났다. 자세한 논의를 위하여 지역과 평화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칼럼의 비율을 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서 각 셀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것은 이론적인 설명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비의 증액에 대하여 지역별 반응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핵개발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문제에 관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설득력을 가진다. 국방비 증액에 대하여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강원도 75%, 대전·충청 72%, 대구·경북 6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순서로는 제주 2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이북 기타의 지역에서는 50%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피부로 실감하는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의 지지와 낮은 비율의 반대(9.7%)를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경북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하여 높은 비율의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 반대의 비율의 면에서는 대구·경북(11.59%)과 부산·경남(11.11%)이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충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높은 지지(72.8%)와 가장 낮은 반대의 비율(6.17%)은 최근 들어 군과 관련한 국가기관이 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집중된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 밖에 인천·경기에도 강화도와 백령도와 같은 해상접경뿐 아니라 육상의 군사적 접경 지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59%를 기록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는 반대의 비율도 12%에서 18%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출된 제주지역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석의 결과는 흥미롭다. 제주도의 경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찬성은 23%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대는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상대적으로 군사적 대치와는 분리되어있는 남쪽의 섬지역이

라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 핵개발의 논리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가장 강경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이념적 성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강경대응으로서 대응 핵개발에 가장 찬성이 높은 지역은 대전·충청지역으로 72.44%로 나타났고, 반대도 2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 관련기관이 이 지역에 많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광주·전라지역에서 북한에 대응한 핵개발에 대한 지지가 두 번째로 높은 62.6%이고 반대의 비율도 23.3%로 두 번째로 낮은 일관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와 결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강원도와 같이 군사적 접경지역에서는 57%가 그리고 보수지역으로 알려진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각각 56%와 52%가 남한의 대응 핵개발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작지만 대응 핵개발에 대한 찬성은 38%에 그친 반면 반대가 46%에 달한다는 점에서 국방비 증액과 일관된 성향을 보여주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확대에 관한 여론에도 지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해서 20%대의 찬성을 보이는 반면, 광주·전라지역에서는 51%, 그리고 제주지역에서는 54%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의 대응 핵개발에 대해서 광주·전라지역의 여론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지지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여론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응징을 주문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관대

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20%대의 찬성과 50%대의 반대를 보여주는 등 지역 편차가 크지 않았다.

평화유지군의 파견에 대한 여론의 지지에 대해서도 지역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하여 강원 73.1%, 인천·경기 70.7%, 부산·울산·경남 70.5%, 그리고 대전·충청 70.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대구·경북 68.5%, 서울 63.5%, 광주·전라 60%의 순서로 높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대의 여론도 순위 면에서 찬성의 여론과 일관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유지군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지지가 높고 반대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찬성이 50% 그리고 반대가 41%로 일반적인 여론의 분포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에도 지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원지역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제주가 66.6%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도 부산·울산·경남이 64.7%, 대구·경북이 63.6%, 인천·경기가 61.2%, 그리고 광주·전라가 58.8%로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서울은 46.8%로 가장 낮은 찬성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의 비율도 찬성의 비율과 일관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반대가 8.3%로 가장 낮지만, 강원지역도 9.7%로 아주 낮은 수준에 속한다. 반대로 대전·충청지역은 2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 19.8%보다 높은 반대를 보

여주고 있다.

일정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찬성과 반대의 분포는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부여는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배우자를 혈연과 지연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의 <표 8>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05년 기준으로 국내의 전체 결혼 100쌍 중에서 약 14쌍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국제결혼이고, 이 중에서 10쌍이 한국인이 외국인 아내와 그리고 4쌍이 한국인이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할 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도와 광역시를 분리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도와 광역시가 분리의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 출신지역과 국적의 문제에 있어서 군복무와 무관하게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 부여에 대해서는 지역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혼인과 관련한 인구구조가 여론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정치에서 지역출신 배경은 평화관으로 대변되는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 형성에 다른 인구통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이지만 지역변수는 안보문제, 군의 역할,

그리고 국적 부여와 같이 지역적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한 논의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설계하는 단계에 지역과 기타 다른 설문을 포함하여 보다 정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 4. 경제수준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일반적으로 정치학 연구 특히 선거행태연구와 관련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의 하나가 바로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교육수준이 결정적인 변수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경제적 조건이 정치적 성향과 이념적 선호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의 평화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가구 소득으로 측정된 개인의 경제상황은 다양한 외교정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한국인의 평화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이 어떠한 방향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와 규범의 유지를 선호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포함되어 현실에 대한 불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와 규범을 변화시키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제도와 규범의 개혁과 유지를 둘러싼 대결구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당과 정책에 의한 선호는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

〈표 10〉 경제수준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이슈	반응	경제수준						
		100만 원 미만	100-199 만 원	200-299 만 원	300-399 만 원	400-499 만 원	500-599 만 원	600만 원 이상
독도문제에 강력 대응	찬성	131 (94.93)	119 (94.44)	176 (96.17)	165 (94.29)	98 (89.91)	68 (90.67)	45 (76.27)
	보통	6 (4.35)	7 (5.56)	7 (3.83)	7 (4.00)	7 (6.42)	6 (8.00)	12 (20.34)
	반대	1 (0.72)	0 (0.0)	0 (0.0)	3 (1.71)	4 (3.67)	1 (1.33)	2 (3.39)
북한 핵개발에 대응 핵개발	찬성	102 (77.86)	78 (62.9)	106 (59.55)	84 (51.22)	50 (46.3)	33 (45.83)	25 (42.37)
	보통	7 (5.34)	11 (8.87)	27 (15.17)	33 (20.12)	20 (18.52)	9 (12.5)	14 (23.73)
	반대	22 (16.79)	35 (28.23)	45 (25.28)	47 (28.66)	38 (35.19)	30 (41.67)	20 (33.9)
개발도상국에 원조지원 확대	찬성	98 (74.24)	83 (67.48)	134 (74.03)	128 (74.85)	84 (77.06)	62 (83.78)	49 (83.05)
	보통	19 (14.39)	29 (23.58)	34 (18.78)	33 (19.3)	23 (21.1)	10 (13.51)	5 (8.47)
	반대	15 (11.36)	11 (8.94)	13 (7.18)	10 (5.85)	2 (1.83)	2 (2.7)	5 (8.47)
국제기구에 분담금 지원확대	찬성	82 (70.69)	73 (60.83)	112 (63.28)	118 (69.41)	80 (72.73)	56 (74.67)	44 (74.58)
	보통	22 (18.97)	31 (25.83)	51 (28.81)	42 (24.71)	26 (23.64)	17 (22.67)	15 (25.42)
	반대	12 (10.34)	16 (13.33)	14 (7.91)	10 (5.88)	4 (3.64)	2 (2.67)	0 (0.0)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확대	찬성	27 (20.15)	39 (30.71)	50 (27.78)	55 (31.79)	38 (34.23)	28 (37.33)	22 (37.29)
	보통	21 (15.67)	22 (17.32)	43 (23.89)	35 (20.23)	28 (25.23)	19 (25.33)	10 (16.95)
	반대	86 (64.18)	66 (51.97)	87 (48.33)	83 (47.98)	45 (40.54)	28 (37.33)	27 (45.76)
우리국민과 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 에게 국적부여	찬성	95 (73.64)	83 (66.94)	109 (61.24)	101 (58.05)	68 (61.82)	42 (56.76)	35 (59.32)
	보통	16 (12.40)	24 (19.35)	38 (21.35)	31 (17.82)	25 (22.73)	16 (21.62)	18 (30.51)
	반대	18 (13.95)	17 (13.71)	31 (17.42)	42 (24.14)	17 (15.45)	16 (21.62)	6 (10.17)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체제에서 일반적인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6개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평화관은 <표 10>에 표시되어 있고 이들은 chi2 검사에서 probability < 0.05의 기준을 충족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대한 강경한 대응에 대하여 반대여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찬성여론에 있어서는 소득수준별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응답자 집단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강렬한 대응에 대한 찬성여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유사한 경향이 반대여론에서도 나타났다. 미세한 차이지만 가구 소득수준이 3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반대여론이 없거나 1% 미만이었었는데 3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3.69%까지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 일수록 일본과 경제적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집단의 경우에는 일본과 특정 외교문제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여전히 독도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에 90% 정도의 지지가 나타났다.

대외정책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은 고소득집단에 많이 나타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북한 핵개발에 대응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주장에서도 나타났다. <표 10>에서 보듯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가장 강경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소득수준별 반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77.8%가 찬성하는 반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별로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최고 소득집단인 6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42.3%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여론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소득수준의 집단의 경우 16.7%만

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반면, 상위 소득 집단에 해당하는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경우 35.1%,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경우 41.5%가,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인 경우 33.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험적이거나 갈등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대응하는 것을 덜 선호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된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대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는 설문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에 대한 결과이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의 경우를 보면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0.1%만이 찬성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외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며 최고 소득계층인 6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37.2%가 북한에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대여론도 찬성여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의 경우 미세한 예외는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강한 반대를 보여주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반대여론의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이 집단은 반대여론이 64%에 달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37.3%가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45.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에 대한 소득수준별 여론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대외정책에서 안보문제와 관련

된 정책에서도 군사적 모험을 동반하거나 이를 통해서 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보다는 비용이 동반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배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은 경제활동에서 안정보다는 국가의 부를 국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대중은 중앙정부가 대외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국내정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가 한국에서도 정부가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재원을 사용하는 만큼 국내의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외지원에 대한 소득수준별 지지 경향은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지원의 확대에 대한 찬성여론의 경우를 보면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70.6%,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60.8%가 지지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74.6%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의 집단의 경우 74.5%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지원확대에 대한 반대여론의 경우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0.3%로 나타나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집단은 2.6%로 나타났고, 6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반대여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지원의 확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지지는 낮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지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74.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경우 67.4%가 지지하는 반면,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경우 83.7%,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의 최상위 집단의 경우 83%가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사의 표명에 있어서는 100만 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11.3%가 반대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경우 1.8% 그리고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경우 2.7%를 보여주는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는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약간의 예외적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여론이 국제협력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국제 기구에 대한 지원과 개발도상국 원조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외적 경제지원을 대내적 기회비용의 대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저소득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대외적인 지원에 대한 소득집단에 따른 여론의 인식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추세이다. 대외적 경제지원에 보여준 한국인들의 여론이 대외정책에 보여준 반응양식은 민주주의적 형태로 변모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당연히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보다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는 73.6%가 찬성하는 반면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56.7%

가 찬성하고, 600만 원 이상의 집단의 경우 59.3%가 찬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당연국적 부여에 대한 반대여론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3.9%인 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집단은 17.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24.1%,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15.4%, 그리고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의 집단의 경우 21.6%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의 당연 부여에 대한 지원과 소득수준의 상호관계는 필요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들의 외국인과의 결혼의 양상을 보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의 국제결혼은 저소득층에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에서 자유가 요구되는데 국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불편함에 대한 적극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은 앞의 <표 8>에 나타난 한국인의 국제결혼의 분포를 참조해보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부여와 지역별 변수의 상관관계의 영향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지역에 저소득층이 다수 분포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시골 인구 중에서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한국 남성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지역과 소득의 변수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도농의 지역분포와 소득분포와 관련한 인구구조가 여론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이다.

## 5. 교육수준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인구통계 지표 중에서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선거연구 등에서 나타났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폭넓게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는 높은 수입을 보장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경제조건이 선순환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한국인의 평화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개인의 교육수준은 다양한 외교정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한국인의 평화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과 교육수준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준이 대외정책으로 표시된 한국인의 평화관에 어떠한 방향에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고찰과 논의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의 수준까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는 반면,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중졸이하, 고졸, 대재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대재 이상이라는 범주는 초급대학 재학, 4년제 대학 재학에서부터, 중퇴, 수료, 졸업, 그리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의 중퇴, 수료, 졸업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현실적인 교육수준의 의미는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

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가 내포하는 교육수준의 특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제도와 규범의 유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일반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고학력자들은 반군사독재 투쟁의 경험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

(표 11) 학력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 분석

정책이슈	반응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국방비 증액	찬성	110 (69.18)	197 (62.54)	270 (56.02)
	보통	34 (21.38)	86 (27.3)	135 (28.01)
	반대	15 (9.43)	32 (10.16)	77 (15.98)
독도문제에 강력한 대응	찬성	163 (95.88)	308 (95.36)	437 (89.37)
	보통	5 (2.94)	13 (4.02)	42 (8.59)
	반대	2 (1.18)	2 (0.62)	10 (2.04)
전시작전권 전환	찬성	75 (52.08)	144 (48.32)	213 (44.94)
	보통	30 (20.83)	48 (16.11)	123 (25.95)
	반대	39 (27.08)	106 (35.57)	138 (29.11)
북한 핵에 대응하여 핵개발	찬성	126 (79.25)	206 (67.10)	196 (41.18)
	보통	9 (5.66)	32 (10.42)	100 (21.01)
	반대	24 (15.09)	69 (22.48)	180 (37.82)
자원확보를 위해 독재정부와 협력	찬성	101 (76.52)	184 (60.93)	254 (52.92)
	보통	21 (15.91)	65 (21.52)	125 (26.04)
	반대	10 (7.58)	53 (17.55)	101 (21.04)
국제기구에 대한지원 확대	찬성	94 (65.28)	202 (65.8)	335 (68.51)
	보통	34 (23.61)	82 (26.71)	129 (26.38)
	반대	16 (11.11)	23 (7.49)	25 (5.11)
북한에 경제지원 확대	찬성	37 (22.56)	85 (26.48)	169 (34.49)
	보통	24 (14.63)	65 (20.25)	113 (23.06)
	반대	103 (62.8)	171 (53.27)	208 (42.45)
평화유지군 파견	찬성	108 (69.68)	228 (73.31)	310 (63.39)
	보통	29 (18.71)	58 (18.65)	136 (27.81)
	반대	18 (11.61)	25 (8.04)	43 (8.79)
우리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부여	찬성	120 (76.43)	199 (62.78)	265 (54.19)
	보통	17 (10.83)	47 (14.83)	137 (28.02)
	반대	20 (12.74)	71 (22.40)	87 (17.79)

\* 표 안의 수치는 빈도, 괄호 안의 수치는 비율을 각각 나타냄

문에 이들이 사회에서 진보적인 가치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를 보면 교육수준이 국방비 증액을 포함해서 모두 9개의 정책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평화관은 <표 11>에 표시되어 있고 이들은 chi2 검사에서 probability < 0.05의 기준을 충족한다. 학력변수와 평화관의 상관관계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안보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을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11>에서 보여지듯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찬성여론을 보면 중졸 이하에서는 69.1%, 고졸에서는 62.5%, 대재 이상에서는 56%가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여론은 중졸 이하에서는 9.4%, 고졸에서는 10.1%, 대재 이상에서는 1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증가할수록 찬성여론은 감소하고, 반대여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학력의 증가는 진보화 경향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경향은 전시작전권의 즉시 전환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핵개발에 대한 응답에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 핵개발에 있어서는 찬성여론의 경우 중졸 이하 79.2%, 고졸 67.1%, 대재 이상 41.1%가 각각 찬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반대여론의 경우 중졸 이하 15%, 고졸 22.4%, 대재 이상 37.8%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전시작전권의 즉시 전환에 대한 여론의 반응의 경우 찬성은 일관

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는 약간의 이변이 있다. 전시작전권을 즉시 전환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한 찬성응답은 중졸 이하 52%, 고졸 48.3%, 대재 이상 44.9%로 학력이 증가할수록 주한 미군의 군사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대여론의 경우는 중졸 이하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27%가 나타난 것은 일관된 경향이지만 고졸의 경우에 반대여론이 가장 높은 35.5% 그리고 대재 이상에서는 29.1%로 반대가 낮게 나타났다. 대재 이상의 학력자들에게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즉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세력 가운데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일본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는 국가의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영토적 연속성과 국가의 위상을 보전하는 점에서 국가 위상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가위상의 문제에서 학력과 관련하여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강력대응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강력대응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찬성의 응답은 중졸 이하 95.8%, 고졸 95.3%, 대재 이상 89.3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졸과 고졸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응답의 경우 중졸 이하 1.1%, 고졸

0.6%, 대재 이상 2.0%로 학력의 증가에 따른 반대여론 증가하는 중졸 이하와 대재 이상의 경우에는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고졸에서는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학력의 증가에 따른 진보적 경향과 학력의 감소에 따른 보수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통계적으로 일반적 경향이 고졸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고졸의 학력의 경우 민족주의적 경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필요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의 비민주주의 정부와 협력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대외정책에서 보편적 가치의 추구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적 경향의 상호관계에 대한 판단 차이의 측정과 관련한 설문 분석에 따르면, 자원 확보를 위하여 독재정부와의 협력에 찬성하는 여론은 중졸 이하 76.5%, 고졸 60.9%, 대재 이상 52.9%로 학력이 낮을수록 보편주의적 가치보다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제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외국의 비민주적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대여론의 경우도 찬성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졸 이하는 7.5%만이 반대의견을 표명하지만 고졸은 17.5%, 그리고 대재 이상의 경우는 2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는 외국과의 협력에도 민주주의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와 인종을 떠나서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인식은 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인권, 평화,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교육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통해 조사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과 학력변수의 반응의 변화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표 11>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국제적인 군사역할의 확대에 대하여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69.6%, 고졸의 경우 73.3%로 증가했다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63.3%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유사한 방향에서 군사역할의 확대에 대한 반대의견의 경우는 반대의견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졸의 경우 8.0%로 감소하는 반면, 대재 이상의 경우 반대여론이 8.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국군의 국제적인 군사역할에 대한 여론은 학력이 낮은 경우와 학력이 높은 경우는 찬성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졸에 해당하는 교육의 중간계층은 찬성여론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고, 반대여론은 이와 일관된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학력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경제분야와 군사분야에서 국제주의적 경향에 반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반면,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의 계층은 군사적 국제주의를 선호하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군사적 국제주의보다 경제적 국제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교육수준이 급속히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의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고졸자들은 국제적으로 군의 적극적 역할이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계층의 선호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을 설명하자면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는 국제주의 및 보편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고

려보다는 국가 위상에 기초한 힘의 과시를 선호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거의 모든 인구 통계변수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는 이념적으로 다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는 국제적 보편주의 가치관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학력 변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졸 이하의 계층에서는 22.5%, 고졸 26.4%, 그리고 대재 이상에서는 34.4%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찬성여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반대여론은 중졸 이하의 계층에서는 62.8%, 고졸 53.2%, 그리고 대재 이상의 경우 42.4%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반대여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과의 상관관계도 소득수준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선호가 높고, 경제적으로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대결 보다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사용하는 데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주장하는 경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억압받는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 약품, 그리고 전쟁물자로 전용이 불가능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와 농기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자

통일 한국을 위한 장기적 접근으로 대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반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당초 지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북한의 고통받는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당초 지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고위 간부들이 전용하고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은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관련되어 있다. 한 국가의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나누는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구분되고, 대만의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구분되는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학력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지원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념적 선호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보다 이념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주의적 경향을 가진다는 일반적인 경향이 북한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학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졸 이하의 경우 76.4%라는 높은 비율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고졸 62.7%, 그리고 대재 이상은 54.1%로 점진적으로 찬성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

다. 반대의견의 경우는 중졸 이하의 경우 12.7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고졸은 22.4%로 증가하고, 대재 이상에서는 17.7%로 고졸학력의 계층보다는 낮지만 중졸의 학력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국적을 당연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학력의 관계는 앞에서 지역변수 또는 소득변수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의 당연 부여에 대한 지원과 학력의 상호관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응답자가 직접 체감하는 필요에 따른 찬성의 여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들의 외국인과의 결혼의 양상을 보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의 국제결혼은 저학력계층에 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저학력의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 배우자와 결혼하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학력층에서 국적부여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국적부여에 대한 지지가 농촌지역, 저소득층, 저학력층에 나타난다는 점은 한국사회의 일반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당연히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대여론의 경우는 대재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 고졸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보편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2010년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유흥업소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지위가 확대되기보다는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수한 예능인이나 프로 스포츠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생겨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국적 취득의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의 동포에게 친척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즉,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지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포괄적 지지에 대한 지지여론은 지방,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 계층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제 5 장

맺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의  
정책적 함의



## 제5장

# 맺는 말: 외교정책과 여론의 정책적 함의

### 1. 연구의 평가: 장점과 단점

대외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평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연구의 범위를 동아시아 국가들로 넓혀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의 확대를 통해 여론의 정책선호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번의 여론조사를 통한 제한된 분석에 기초해서 여론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각을 평화관이란 이름으로 분석하는 것은 일반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이었다.

개인의 특정 정책에 대한 선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개인의 행위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손쉽게 고려되는 변수로 연령, 성별,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다루어져 왔다. 이런 인구통계가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선호와 행위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정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문제에 있어서 유사한 선호와 행위를 공유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보적으로 평화관과 인구통계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한 분야에서 인구통계변수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중의 선호와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는 학자들에게는 학문적인 논쟁의 대상이며 일반 대중들에게는 흥미로운 쟁점이기도 하지만 정책결정자에게 정책적인 중요성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국인의 평화관에 대한 연구는 정책결정자, 학자, 대중 모두에게 관심있는 주제로서 연구질문에 대답을 주려는 의도로 시행하였다.

학문적, 대중적, 정책적 연구목표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정책적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1) 한국인의 여론이 안보와 경제분야에서 주변국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관념을 구체화시켜 제시하였고, 2)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대외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 인구통계와 대외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의를 제시하였다.

대중의 관심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따른다. 안보문제, 경제문제, 국적문제, 주변국 관계 등 정책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통계와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과정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주장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지역, 학력, 소득수준과 같은 한국의 정치에서 민감한 변수와 정책의 선호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정서에 반

하는 의도로 읽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책적 선호와 대중의 인구통계적 특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차원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론적 차원 그리고 사회집단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학문적 논쟁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의 범위 자체가 한국이라는 하나의 사례에 머물러 있으며, 2010년 처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여론과 정책선호의 상관관계의 유무와 상관관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표본으로 동아시아 국가를 추가로 포함하고, 시기도 매년 누적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가 한국 학계에서 발표된 여론과 대외정책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대북정책과 같이 한국사회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민감한 분야로 평가되는 하나의 정책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논의되는 여론이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영향력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II. 결론에 가늠하여: 한국사회에서 여론의 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중의 의견을 의미하는 여론은 그 자체로서 정당성과 그 정당성에 기초한 영향력을 가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표출된다. 대중들

이 공유하는 민족의식, 국가에 대한 인식, 국제관계에 관한 대외인식,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론은 형성되고, 형성된 여론이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대외정책과 여론의 상관관계를 이야기 할 때 복잡한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대중들의 대외인식이나 여론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면서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영향을 주는 한편, 국가가 주도하는 대외관계의 추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론과 정책의 상관관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여론과 정책의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정책의 집행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여론의 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둘째, 여론은 정책에 수용되는 상황과 수용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감한 문제이다. 정부의 정책이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다른 한편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는 인기에 영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여론에 대한 다른 시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에 근거한 시각의 차이도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론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여론의 일방적인 선호가 분명한 반면, 다른 주제에는 여론이 양분되어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정치 현

실에서 여론의 분포는 단순하지 않다. 여론의 상당수가 양 극단을 피하고, 가운데에 몰려 있는 정상분포가 다수 존재하지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들이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대답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대다수가 일방적인 선호를 보여 주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의 평화관 연구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공유된 의견을, 앞에서 논의한 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여 논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외교정책 자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볼 때,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의 경우에도 나타났다. 제4장의 서술적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책의 관심에 있어서 범죄예방, 경제문제, 인권과 민주주의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을 평화관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평화안보, 국제경제, 보편적 가치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평화안보 영역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안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일관되게 지지하는 가치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선호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특이했던 점은 모름 또는 무응답의 비율이 많았다는 점이다.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에 비해서 국제무역에 대해서 여론의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상당

한 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도 역시 장기간 변화하지 않는 가치관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근거한 정책의 선호로 보인다.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서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보문제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반면, 경제문제에서는 미국이 우세하지만 중국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한중교역의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평화관으로 표현된 여론의 대외정책에 대한 선호와 이념적 성향 그리고 인구통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chi<sup>2</sup> 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서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평화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의미있는 해석을 제공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인의 평화관의 전개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와 분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정 · 이행. 1992. “민주화와 한국외교정책: 이론적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32집 2호. pp. 3-22.
- 김성주. 2008. “민주화 시대 한국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권 2호. pp. 271-292.
- \_\_\_\_\_. 2001.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 국제정치 패러다임: 국가주권과 시장의 상관성.”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권 1호. pp. 247-287.
- 김유남. 1999.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서울: 학영사.
- 김준석. 2010. “중견국가와 인도적 국제주의 외교정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대외원조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1호. pp. 263-291.
- 김태현 · 남궁곤 · 양유석. 2003.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집 3호. pp. 151-174.

- 김태호. 2008. “중국의 ‘군사적 부상’: 한국의 안보환경을 중심으로.” 김태호 외. 『중국의외교 연구의 새로운 영역』. 파주, 경기도: 도서출판 나남. pp. 69-123.
- 김치욱. 2009.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학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15권 4호. pp. 81-116.
- 남궁근. 1999. “외교정책과 여론: Almond-Lippmann Consensus와 그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15권 1호. pp. 31-64.
- 문우진. 2009.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1호. pp. 87-112.
- 박선원. 2002. “햇볕정책과 여론: 지속성과 변용의 관점에서 본 실증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2호. pp. 135-166.
- 박윤주. 2010. “G20와 중견국가의 역할 연구: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8집 1호. pp. 293-316.
- 박재규 · 한승주 공역. 1976. 『외교정책의 수행: 제8장 여론과 인도주의적 고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손병권. 2007. “루즈벨트와 미국의 국제주의로의 전환: 국내의 상황, 여론, 리더십.” 『동서연구』, Vol. 19, No. 1. pp. 33-57.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이성우. 2006. “한일관계에 있어서 협력과 분쟁에 대한 경험적 분석: 일본 망언의 득실.” 『일본학보』 제69집. pp. 525-538.
- 이재우. 2006.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 있어 유·무상원조의 효과 분석.” 『수은해외경제』. pp. 4-22.
- 이정희. 2002. “통일관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집 4호. pp. 117-149.
- \_\_\_\_\_. 2004. “신보수주의와 미국의 외교정책: 사회세력의 영향력을 중심

- 으로.” 『미국학논집』 36집 3호. pp. 200-227.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 하영선. 1989. “한국의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28집 2호. pp. 3-15.
- 한국전기통신공사. 1989. 『전기통신통계연보』. 서울.
- 홍득표. 2004. 『현대정치과정의 이해』. 서울: 학문사.
- Almond, Gabriel A. 1956. “Public Opinio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20, No. 2. pp. 371-378.
- Aldrich, John H., John L. Sullivan, and Eugene Borgida. 1989. “Foreign Affairs and Issue Voting: Do Presidential Candidates “Waltz Before a Blind Aud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 No. 1. pp. 123-141.
- Bouton, Marshall M., ed. 2006. *The United States and the Rise of China and India: Results of a 2006 Multination Survey of Public Opinion*. Chicago, IL: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Brace, Paul, Kellie Sims-Butler, Kevin Arceneaux, and Martin Johnson. 2002. “Public Opinion in the American States: New Perspectives Using National Survey Dat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1. pp. 173-189.
- Broyles, William Jr. 1990. “Why Men Love War.” Cancian, Francesca M. and James William Gibson, eds. *Making War Making Peace: The Social Foundations of Violent Conflict*.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Chittick, William O., Keith R. Billingsley, and Rick Travis. 1995. “A Three-

- Dimensional Model of American Foreign Policy Belief.”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9, No. 3. pp. 313-331.
- Clarke, H. D., and N. Dutt. 1991. “Measuring Value Change in Western Industrialized Societies: The Impact of Unemploy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5, No. 3. pp. 905-920.
- Clarke, Harold D., Allan Kornberg, Chris McIntyre, Petra Bauer-Kaase, and Max Kaase. 1999. “The Effect of Economic Priorities on the Measurement of Value Change: New Experimental Evid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 pp. 637-647.
- Cohen, Bernard C. 1973. *The Public’s Impact on Foreign Policy*. Boston, MA: Little Brown.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 pp. 167-191.
- Gilens, Martin. 2001. “Political Ignorance and Collective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2. pp. 379-396.
- Granato, J., R. Inglehart, and D. Leblang. 1996. “The Effect of Cultural Values o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Hypotheses, and Some Empirical Tes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0, No. 3. pp. 607-631.
- Harwood L. Childs. 1965. *Public Opinion: Nature, Formation, and Role*. Princeton, NJ: D. Van Nostrand.
- Hinckley, Ronald H. 1992. *People, Polls, and Policy-Makers: American Public Opinion and National Security*. New York, NY: Lexington Books.
- Hill, Kevin A. 1993. “The Domestic Sources of Foreign Policy Making: Congressional Voting and American Mass Attitudes toward South

- Afric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7. pp. 195-214.
- Holsti, Ole R. 1996.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urwitz, Jon, and Mark Peffley. 1987. “How Are Foreign Policy Attitudes Structured? A Hierarchical Model.”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1, No. 4. pp. 1099-1120.
- Huntington, Samuel.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ey, V. O. 1961. *Public Opinion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NY: Alfred A. Knopf.
- Leeds, Brett Ashley, and David R. Davis. 1997. “Domestic Political Vulnerability and International Disput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6. pp. 814-834.
- Lippmann, Walter. 1949. *Public Opinion*. New York, NY: Free Press.
- Mayer, William. 1992. *The Changing American Mind: How and Why American Public Opinion Changed between 1960 and 1988*.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onroe, Alan. 1979. “Consistency between Public Preferences and National Policy Decisions.” *American Politics Quarterly*, Vol. 7. pp. 3-19.
- Nincic, Miroslav. 1997. “Domestic Costs, the U.S. Public, and the Isolationist Calculu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pp. 593-610.
- Page, Benjamin, and Robert Shapiro.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ffley, Mark and Jon Hurwitz. 1992. “International Events and Foreign Policy

- Belief.”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pp. 431-461.
- Petry, Francois. 1999. “The Opinion-Policy Relationship in Canada.” *Journal of Politics*, Vol. 61, No. 2. pp. 540-550.
- Powlick, Philip J., and Andrew Z. Katz. 1998. “Defining the American Public Opinion/Foreign Policy Nexu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42. pp.29-61.
- Rielly, John E. 1991.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1991*. Chicago, IL: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_\_\_\_\_. 1987.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1987*. Chicago, IL: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_\_\_\_\_. 1983.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1983*. Chicago, IL: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Rosenau, James N. 1967. *Domestic Sources of Foreign Policy*. New York, NY: Free Press
- Shapiro, Robert Y., and Benjamin I. Page. 1988. “Foreign Policy and the Rational Public.”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1, No. 2. pp.211-247.
- Spanier, John, and Eric M. Uslaner. 1989. *American Foreign Policy Making and the Democratic Dilemmas*. Belmont,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Wittkopf, Eugene R. 1990. *Face of Internationalism: Public Opinion and American Foreign Policy*.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The Fut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 Yi, Seong-Woo. 2008. “The Na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Events: Are

they mutually exclusiv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48, No. 5. pp. 81-104.



## | 색 인 |

### | 기 |

가중평균치 74  
강경주의(hard-liner) 36  
강경주의자 37  
개혁주의 30  
경제 규모 87, 88  
경제지원 104  
고립주의(isolationist) 36, 135  
고립주의자 37  
공공재 114  
공동체 가치 121  
공리주의자 45  
공적개발원조(ODA) 111  
관여(engagement) 119  
교육수준 149  
구조적인 오류 64  
국가위상 152  
국내비용이론 35  
국적의 문제 128  
국제규범 110

국제기구 110  
국제적 공공재 81  
국제주의(internationalist) 36, 135,  
154  
국제주의자 37  
군사대국화 85  
귀무가설(null hypothesis) 96  
글로벌 코리아 94  
기술통계 96  
기여외교 67  
기회비용이론(domestic cost theory)  
72

### | 니 |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94  
뉴라이트 127

| ㄷ |

다면성(versatility) 57  
 대립가설(hypothesis) 96  
 대립노선 126  
 대북정책 27, 28, 31, 163  
 대의민주주의 164  
 대의제 민주주의 48  
 대중추수주의(populism) 24, 47  
 동북아 균형자론 94

| ㅁ |

모수집단(population) 56  
 모수통계조사(census) 56  
 물질주의(materialism)세대 127  
 물질주의 이후(post materialism) 세  
 대 127  
 민족국가 100  
 민족주의 29

| ㅂ |

반공외교 93  
 병역의무 106  
 보수화 123  
 보편적 가치 110, 115  
 보편주의 155  
 보편주의적 가치 82  
 보호무역주의 108  
 북한 핵개발 144  
 분산분석(ANOVA) 38, 96  
 비계획적 인터뷰 62, 63

비구조적 비방향성 인터뷰 62  
 비구조적 인터뷰 62, 63  
 비민주적 정부와의 협력 110  
 비자발적인 미응답 60  
 valence issue 81

| ㅅ |

서술통계 38  
 성별 차이 130  
 성취동기 120  
 소득수준 149  
 수용주의(accommodationist) 36, 37  
 신보주의 26

| ㅇ |

안보문제 118  
 알몬드-리프만 32, 40  
 알몬드와 리프만의 합의(Almond-  
 Lippmann Consensus) 49  
 애국주의 30  
 엘리트 민주주의 24  
 엘리트 민주주의이론 47  
 여론(public opinion) 23, 40, 45, 46,  
 163  
 여론조사 16  
 역사 왜곡 100, 101  
 연계이론 25, 95  
 연성국력 67  
 우편조사 58  
 위협대비(hedging) 119

이념적 선호 118  
 이념적 성향 99, 103  
 이중국적 106, 107  
 인구통계 120  
 인구통계학적 변수 162  
 인류보편주의의 가치 107  
 인자분석(factor analysis) 34, 35  
 인터뷰 설문 61  
 일반화 161  
 일반화 가능성(generalizability) 58  
 일본의 망언 101

| ㅈ |

자기선발(self selection) 15  
 자발적 미응답 60  
 자원확보 124  
 자유주의자 32  
 장기불황 89  
 전시작전권의 전환 105  
 전환가능성(fungibility) 119  
 정당선호 98  
 정서이론(mood theory) 34, 38  
 정체성 106  
 증견국가의 역할 111  
 지역주의 136  
 직접민주주의 164  
 집중적 인터뷰 62

| ㅊ |

천안함 사태 111  
 추출 59

| ㅊ |

평화관 18, 121, 161, 165  
 평화유지군 113  
 평화유지군의 파병 127  
 평화주의 30  
 포용노선 126  
 표본조사(survey research) 56  
 표본 추출 65

| ㅊ |

two-level game 95

| ㅎ |

한·미동맹 93, 94  
 한국전쟁 123  
 항진명제(tautology) 24  
 햇볕정책 93  
 현실주의 29  
 현실주의자 32  
 협력(의) 파트너 83, 84  
 효율성(efficiency) 57



## | 지은이 소개 |

### 【 이성우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귀국 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공공분쟁 사례연구”를 주제로 대한민국 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학술활동으로는 미국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다.

